

#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第9回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3. 12. 15

民族統一研究院

## 序 文

南北韓은 이제 지난 시대의 유물인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불신을 해소하여 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열어나아가야 한다. 민족통일을 위한 共存共榮의 基調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시기임을 인식해야 할 단계이다.

그러나 文民政府 출범과 함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는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올해도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채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어온 상태에서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북화해와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인식하에 民族統一研究院에서는 1993년 12월 15일 「南北韓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이라는 주제로 제9회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번 국내학술회의에서 「중국의 동북아정책 전망」, 「북한의 대남전략 분석 및 전망」 그리고 「남북한관계 현황과 전망」의 3편의 논문과 관계전문가와 학자들의 토론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발간과정에서 토론 내용의 일부는 재편집을 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남북한관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유익한 성찰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12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 目 次

## 序 文

開 會 辭 ..... 李秉龍 ... 1

## I. 會議 ..... 3

### 1. 中國의 東北亞政策 展望：

多者安保協力에 대한 立場을 중심으로 ..... 申相振 ... 5

2. 北韓의 對南戰略 分析 및 展望 ..... 全賢俊 ... 30

3.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金道泰 ... 59

## II. 綜合討論：南北韓 關係 現況 및 情勢展望 ..... 79

附錄：會議日程 ..... 106

## 開 會 辭

多事多難했던 癸酉年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지난 한해의 情勢 推移를 分析·整理하고 내년의 情勢를 展望하기 위한 第9回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學術會議에 참여해주신 學者·專門家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公私多忙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貴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歡迎하며 감사드립니다.

文民政府의 출범과 함께 우리 국민들은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轉機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시다만, 지난 3월 北韓의 NPT 탈퇴선언을 둘러싼 核問題로 남북한관계는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統一과 南北韓關係의 改善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念願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核問題로 인하여 남북한관계가 올해도 전혀 改善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北韓은 最高人民會議에서 黨政개편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아 체제옹호를 위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3차 7개년 경제건설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지금까지의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수정하여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 분야를 중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북한이 제한적이거나 開放政策을 조심스럽게 추구 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러한 轉換期的 狀況을 맞이하여 저희 研究院은 내년의 「中國

의 東北亞政策에 대한 展望」과 「北韓의 對南戰略 分析·展望」, 「南北韓關係의 現況을 分析 및 展望」하고 그 토대위에서 統一問題研究 및 南北韓關係에 대한 政策代案 개발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學術會議가 올 한해를 정리하고 來年의 周邊情勢와 南北韓關係를 展望하는데 있어 유익한 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斯界의 專門家 여러분께서 자유롭고 진지한 高見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學術회의에서는 저희 研究院의 研究陳들이 견해를 발표하고 평가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외부 學者·專門家들의 많은 叱正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 I. 會議

빈 면

# 中國의 東北亞政策 展望

— 多者安保協力에 대한 立場을 중심으로

申 相 振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目 次

- |                       |                              |
|-----------------------|------------------------------|
| I. 序 論                | IV. 域內 多者安保協力體 形成에 대한 中國의 立場 |
| II. 東北亞 情勢에 대한 中國의 認識 | V. 結 論                       |
| III. 中國의 東北亞政策 基調와 方向 |                              |
| 1. 東北亞政策 基調           |                              |
| 2. 東北亞政策 方向           |                              |

## I. 序 論

구소련의 붕괴와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하여 냉전이후의 국제체제는 미·소 兩極體制에서 미국·유럽·일본·중국·러시아 등 多極體制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국가간 관계도 과거 냉전시대에 강조되었던 兩者主義에서 탈피, 점차 多者主義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국과 러시아간 동반자관계 확립으로 인하여 世界大戰 발발 가능성이 감소되었으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지역국가들의 군비경쟁 및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이익확보를

위한 첨예한 대립 지속으로 地域紛爭 발발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반면 중국과 일본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신장되는 등 다극체제로의 질서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토분쟁, 군비경쟁, 환경 및 인권문제 등 지역분쟁 요인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도 국제체제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불안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域內 多者安保協力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를 포함하는 아·태지역은 성공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관리해 온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역사적·문화적·지리적 배경 및 공통의 위협인식 부재로 인하여 다자 안보협력체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역내 다자안보 구상을 자국에 대한 包圍戰略으로 간주하여 온 중국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왔다. 과거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한 중국의 이 중적이며 불확실한 자세는 同 構想의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구소련 붕괴이후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의 참여 없이는 지역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따라서 냉전이후시기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同 構想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1994년 韓半島 統一環境을 전망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중국이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정책자세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아정책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 II. 東北亞 情勢에 대한 中國의 認識

1993년 동북아에서는 미·러간 완전한 동반자관계 구축, 중·일 안보대화 개최(12. 20), 중·러간 경제·군사교류 확대,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정립 약속 및 시애틀 APEC 지도자회의 개최 등으로 和解·協力 분위기가 深化·發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러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 일의 역할증대 움직임,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과 영토문제 등 기존 분쟁요인 상존, 러시아 정세불안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도는 동북아 세력균형 재편과정에 不安定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국제체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약화됨으로써 미·러 양극체제에서 벗어나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 미·일·중 3極體制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3극체제하에서 미·일·중은 상호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협력관계 발전을 통해 지역질서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중국도 냉전체제 붕괴이후 국제질서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過渡期에 처해 있어서 不確實性和 不安定性을 띠고 있다는데 동감하고 있다. 중국은 구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 와해로 強大國間 理念對立과 軍備競爭이 완화되어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민족분규, 영토분쟁 및 환경·마약·밀수 등 냉전

시대에 잠재되었던 葛藤要因들이 새로이 분출됨으로써 소규모 지역분쟁 발발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sup>1)</sup>

또한 중국은 현 국제질서가 多極化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한 霸權主義와 強權政治의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구소련 붕괴, 경제침체에 따른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 및 일, 중, 유럽공동체 등의 정치·경제력 증대로 인하여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가 미국을 頂点으로 하여 미, 일, 중, 러, 유럽 등 5개 세력이 상호 협력·견제하는 다극체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구소련 와해 이후 미국이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唯一 霸權國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2)</sup>

1990년대 아·태 및 동북아시아 질서와 관련, 중국은 유럽 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냉전의 잔재 지속, 영토문제 미해결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긴장과 갈등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중국은 아·태 및 동북아시아에서도 강대국간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으나, 地域紛爭 可能性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태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譚取榮, “複雜多變的國際形勢,” 「瞭望」, 1992年 第49期(1992. 12. 7), pp. 35-37; Xin Hua, “Characteristics of the World Situation,” *Beijing Review*, January 11-17, 1993, pp. 8-11.

2) 王殊, “認識新的世界,” 「國際展望」, 1993年 第4期(1993. 2. 23), pp. 3-5.

3) 萬光, “九十年代亞太格局的演變,” 「瞭望」, 1992年 第44期(1992. 11. 2), p. 41.

첫째, 중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미·러를 중심으로한 兩極體制가 瓦解되고 미, 일, 중을 주축으로 하는 三極體制가 새로이 形成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4)</sup> 중국은 이러한 세력균형 변화가 미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역내질서를 독단적으로 좌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안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5)</sup>

둘째, 周邊國과의 善隣關係 강화로 중국은 자신의 안보환경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6)</sup> 중국은 1991년 러시아와 국경문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과거 양국간 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동부국경선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국경선지역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 병력 감축과 경제협력 등을 통한 相互信賴回復 노력으로 인하여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또한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인도, 베트남, 한국 등 주변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룸으로써 중국은 주변국들에 의한 안보위협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국에 대한 중국의 선린외교는 지역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내 안보환경 개선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및 대외 영향력 확대에

4) 1990년대 아·태지역에서 양극체제가 붕괴되고 미, 일, 중 삼극체제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Wang Jisi, "East Asia: Prospects for Cooperation," *Beijing Review*, July 19-25, 1993, p. 9; Xu Xin, "Changing Chinese Security Perceptions,"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Working Paper*, no. 27(April 1993), p. 11 등 참조.

5) 다극체제가 양극체제 보다 중국의 안보에 유리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David Shambaugh, "China's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Survival*, vol. 34, no. 2(Summer 1992), pp. 91-93; Li Zhongcheng, Guo Chunling, "World Trends 1993,"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1(January 1993), pp. 4-5.

6) 鄭言思, "1992:靈活務實的中國外交," 「瞭望」, 1992年 第51期(1992. 12. 21), PP. 7,46; 錢其琛, "回顧與展望," 「人民日報」, 1992. 12. 30.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미국의 역내 唯一 霸權國 지위 유지와 일본의 정치·군사적 役割增大 모색이 중국의 안보에 직·간접적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함대함 미사일 판매 결정(9. 4), 클린턴 행정부의 對中 인권 개선 요구 및 「銀河號」 화물선에 대한 추적, 미 하원의 2000년 올림픽 북경개최 반대 결의안(7. 26)과 티베트法案(9. 21) 채택 등을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음모라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바 있는 중국은 일본의 캄보디아 파병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노력 등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기도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沿岸地域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서도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넷째, 중국은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대만의 분리 독립 움직임 및 북한 핵문제 등이 아·태지역 정세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문제가 1990년대 아·태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잠재적 위협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sup>7)</sup> 주변정세의 안정유지를 바라고 역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은 이들 문제들이 國際化되는 것을 反對

---

7) Xu Xin, "Changing Chinese Security Perceptions,"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Working Paper*, no. 27 (April 1993), p. 18.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Ⅲ. 中國의 東北亞政策 基調와 方向

#### 1. 東北亞政策 基調

1990년대 中國의 東北亞政策 基調는 첫째, 대내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에 유리한 周邊環境을 造成하고, 둘째, 역내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미국 등 西方을 牽制하고<sup>8)</sup> 역내에서 강대국으로서의 影響力을 維持·擴大하는 것이다.

中國은 현재 대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平和로운 周邊環境을 造成하는 데에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세의 안정 뿐만 아니라 대외환경의 안정이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中國은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이념과 체제상의 상이보다 공통 利益의 존재 여부에 의해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中國은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과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일본과 상호 방문외교를 통해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과거 갈등관계에 처해 있었던 인도와 베트남 등과도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또한 中國은 1993년을 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

8) Yu-shan Wu, "The Collapse of the Bipolar System and Mainland China's Foreign Policy," *Issues & Studies*, vol. 29, no. 7(July 1993), p. 6.

강화의 해로 설정하여 동남아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1992년 8월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 한 것도 주변국과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기조하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核武器 개발 등 동북아질서 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정책자세에 대해서도 중국은 과거의 지지입장을 수정,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있다.<sup>9)</sup>

이와 같이 중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 주변국가들과 선린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완화·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0)</sup> 특히 러시아 국방부장 그라초프를 초청(11. 8~11)하여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은 아시아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影響力을 擴大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력 등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홍콩과 대만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역내문제에 대한 發言權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 들어 중국이 「全方位 外交」를 주창하고 있는 점도 아·

9)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 핵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現代國際關係研究所 부소장 徐淡과 필자의 대화, 1993. 12. 4.

10) 중국 上海 和平與發展研究所 부소장 楊潔勉과 필자의 대화, 1993. 12. 7; Michael Richardson, "China said to Court Asians As a Buffer Against U.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4-25, 1993.

태 및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중국은 캄보디아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 지역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방대한 財政赤字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구입을 추진하는 등 軍 裝 備 現 代 化를 적극화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2년 주변국 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를 중국영토 로 규정하는 「領海法」을 제정한 바 있고, 「원양방어전략」을 전개 하기 위해 해·공군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들은 모두 지역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정책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東北亞政策 方向

### 가. 對美政策

이와 같은 동북아정책 기조로 판단해 볼 때, 1990년대 중국의 對美政策은 대내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주변환경 조성과 역내 영향력 확대라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역내에서 假想敵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霸權政策을 견제하고자 하면서 도 미국과 경제 및 안보적 차원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sup>11)</sup>

미·소 양극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약화

---

11) 중·미관계를 假想敵 개념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關文亮, “圍堵, 牽制, 離間, 抹黑,” 「文匯報」(香港), 1993. 9. 17.

됨으로써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과 域內 安定 및 對日 牽制 등을 위하여 여전히 미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에 대해 選別的으로 妥協 政策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黨 제14차 3중 전회(11. 11~14)에서 국유기업 체제개혁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을 결정하였는 바,<sup>12)</sup> 對美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는 등 동북아에서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경계하면서도, 주변국과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對美關係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과 한국 등 역내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중국과 선린관계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이며, 중국이 미국의 對中 인권개선 및 무역역조 시정 요구 등에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경우 미국이 대만에 대해 더 많은 尖端武器를 제공하는 등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가능한한 협력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對美關係를 改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이 9월말 對中 「行動 備忘錄」을 채택한 이후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11. 20)하는 등 중국에 대한 기존 강경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對美政策도 갈등관계를

12) 14차 3중전회 공식 문건은 “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文匯報」, 1993. 11. 17 참조.

심화시키기 보다는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 나. 對日政策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을 경계하면서도 대내 정치·경제적 목표 달성과 대서방 관계개선의 증개자로 활용하기 위해 對日 협력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안보면에서 중국은 일본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 국제질서가 다원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권문제와 정치 민주화를 이유로 한 미국의 對中 압력이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안보전략적 협력 구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sup>13)</sup> 또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내 정치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본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을 묵인한 바 있고, 錢其琛 외교부장의 訪日(5. 29~6. 1)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보대화를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던 바 있다.<sup>14)</sup>

---

13) Xu Zhixian, "Sino-Japanese Relations Continue Enhanced," *Beijing Review*, October 12-18, 1992, p. 20.

14) 「人民日報」, 1993. 6. 1.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지역안정에 공헌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때만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지역세력균형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공식적으로는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역내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 강화를 염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5)</sup> 따라서 향후 釣魚臺列島の 영유권문제 및 동남아와 한반도 등에서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중·일관계가 악화될 소지도 있다. 아울러 중국은 200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는 「小康段階」(개발도상국 경제수준) 진입을 위해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일본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의 블럭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對日 경제협력 확대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다. 대러시아정책

1990년대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안정을 회복할 경우 동북아에서 과거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국가안보와 對美·日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선린관계 유지 필요성을 갖고 있다.

먼저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對中 「和

15) 「人民日報」, 1993. 5. 25.

平演變」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2년말 옐친 방중시 러시아와 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우호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던 바 있고,<sup>16)</sup> 軍 인사 교환 방문과 무기구매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南沙群島의 영유권 확보와 홍콩과 대만의 주권 회복 등 중·장기 목표 실현을 위해 국방현대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기술에 의해서는 현대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무기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다량의 현대 무기와 기술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對中 압력이 강화되고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 행보가 가속화 될 수록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정치·군사협력 추구 노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과 선린관계 유지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와 현안이 되고 있는 국경선 문제를 완전 타결짓고자 하고 있다. 1991년 江澤民의 訪蘇時 체결된 동부국경선문제에 대한 협정을 계기로 현재는 국경선 문제가 중·러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가 대내 안정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 자세를 취할 경우 러시아가 국경선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키르기즈와 카자흐공화국 등 회교도가 중국 新疆省内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서부지역 국경선문제를 타결지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 국방부장 그라초프의 중국 방문시(11.8~11)

---

16) 「人民日報」, 1992. 12. 19.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였던 바와 같이 러시아와 국경선문제에 대한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러시아와의 선린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로부터 군사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양국 병력이 점진적으로 감축되도록 외교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 라. 대한반도정책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범위로 간주하여 한반도의 安定維持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도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위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유지 지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두개 한국을 정식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남북대화의 진전을 지지하여 왔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影響力 擴大를 중요한 정책기조로 설정·추진하고 있다.<sup>17)</sup>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等距離政策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남한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화 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확대를 위해 북한과 정치·군사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sup>18)</sup>

17) Jia Hao and Zhua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2, no. 12(December 1992), p. 1142.

18) 중국 國際問題研究中心 부총간사 高鏞과 필자의 대화, 1993. 12. 4.

한편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정세 안정을 저해하는 등 중국에게 결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한반도의 非核化를 주장하고,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를 논의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 점을 통해서도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바라지 않는 중국의 입장을 알 수 있다.

#### IV. 域內 多者安保協力體 形成에 대한 中國의 立場

과거 중국은 아·태 및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 주장을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반대하여 왔다.<sup>19)</sup> 또한 중국은 역내의 복잡한 지역분쟁과 갈등을 하나의 안보협력체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 우선 양자관계 개선에 의해 域內 國家間 信賴增進과 緊張緩和를 도모하여 안보적 이해를 구축한 다음 다자안보협력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sup>20)</sup>

과거 중국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여온 것은 역내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크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는 地

19) 과거 중·소관계가 긴장상태에 있었을 당시 소련은 아시아집단안보구상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을 구축하고 중국을 포위해서 봉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 구상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

20) Li Luy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Beijing Review*, August 19-25, 1991, p. 8.

域問題가 國際化 되기 보다는 관련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 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이 지닌 特殊한 事情(이념대립 지속, 영토문제와 분단문제 등 현안 미해결, 문화적 다양성 등)을 이유로 CSCE와 같은 형태의 포괄적인 형태의 협력체 형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sup>21)</sup> 중국은 역내에 하나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체를 구축할 경우, 이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에 대한 강대국들의 간섭을 야기할 구실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CSCE형 다자 안보협력회의가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정치·군사적 현상의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국은 역내 집단안보협력체가 중국을 假想敵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여 왔으며,<sup>22)</sup> 집단안보협력체에의 참여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강대국간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감소된 반면 地域紛爭의 危險性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중국과 일본 등 지역국들의 발언권이 확대되는 등 다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21) 梁于藩, 陳佩堯, “亞太安全: 在經濟合作基礎上建立信任,” 「國際展望」, 1992年第17期(1993. 9. 8), p. 5.

22) 따라서 중국은 역내에서 타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大公報」(香港), 1992. 8. 18; 張雅君, “九〇年代中共的亞太戰略,”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1期(1992. 11), pp. 22-23.

또한 중국은 아·태지역 국가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역내국가들이 공동번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안보영역에서 지역국가간 보다 많은 공통 인식을 갖게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sup>23)</sup>

아울러 중국은 지난 십여년 동안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 결과 대내 정치·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고 대외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이 과거와 같이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적대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최근들어 地域紛爭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창설 구상에 점차 共感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24)</sup> 특히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周邊國의 憂慮를 拂拭시키고 日本의 軍事 大國化를 牽制할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구상에 지지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 심화와 환경과 마약문제 등 세계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요구 증대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은 국제기구의 안보협력 논의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23) 梁子藩, 陳佩堯, 앞의 글, p. 5.

24) Qian Qichen, "China Ready to take part in Asian Security Dialogue," *Beijing Review*, August 9-15, 1993, p. 9; Yan Xuetong, "China's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5(May 1993), p. 6.

이와 관련, 중국은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 등 세계문제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협력하여 왔다. 또한 중국은 1993년 6월 錢其琛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시 지역문제 논의를 위한 중·일간 안보대화 개최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sup>25)</sup> 「아세안지역포럼」 창설을 지지하고 클린턴이 제안하여 시애틀에서 개최(11. 20)된 아·태경제협력회의 비공식 지도자회의에도 참석하였다.<sup>26)</sup>

이와 같이 중국이 기존 입장을 수정하여 역내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25) 1989년 천안문사건이후 대서방관계가 소원해지자 중국은 일본과의 정치·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중국은 1992년 7월 양국 외교실무자간 정책기 획협의회를 개최하여 안보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錢其琛의 訪日時에는 지역문제 논의를 위한 중·일 안보대화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중·일은 1994년 상반기 북한 핵문제 해결 및 양국의 군사력 증강문제 등 안보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일본과 안보협력문제 논의를 적극화 하고 있는 것은 미·일 주도하에 지역안보협력체가 형성되는 것을 견제하고 중국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6) 중국은 아·태경제협력회의가 미국 주도하의 아·태지역 다자협력체로 발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며, 대만과 홍콩이 아·태경제협력 회의 비공식 지도자회의에 정식 국가자격으로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당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제의한 「신 태평양공동체」 구상이 유럽통합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시애틀 아·태경제협력회의 비공식 지도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악화된 대미관계를 개선시키는 한편, 중국이 아·태지역 협력체 형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서도 중국은 同 회의에 참여하여 개혁·개방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文匯報」(香港), 1993. 10. 18.

가 단기간내에 형성되는 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양자간 신뢰증진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역내 다자안보협력체가 가까운 시일내에 형성될 경우 중국은 南沙群島의 영유권 확보 및 홍콩과 대만에 대한 주권회복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역내 다자안보협력 논의시 인권문제 등 대내 정치문제를 논외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sup>27)</sup>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체가 내정불간섭 등 평화공존 5개원칙을 비롯 다음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sup>28)</sup>

첫째, 국가간 관계에서 霸權主義,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강압정치, 빈국에 대한 부국의 패권행위를 반대한다. 모든 아·태지역 국가들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타국을 상대로 하는 軍事集團이나 政治聯合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제분쟁과 각종 역사적 문제 및 향후 발생할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영토문제와 국경문제 등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답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해결 이전 관련국들은 안전과 신뢰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경제협력

27) 중국 上海 和平與發展研究所 常務 부소장 劉文龍과 필자의 대화, 1993. 12. 7.

28) 「人民日報」, 1993. 2. 3; “國務委員兼外交部長錢其琛在《聯合國亞太地區裁軍與安全問題上海研討會》上的講話,” 1992年 第16期(1992. 8. 23), p. 4; 梁于藩, 陳佩堯, 앞의 글, p. 5.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태지역국들은 군비를 正當防衛에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면서 이를 아·태지역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방대한 해군력을 감축해야 한다. 넷째,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과 비핵국가와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사용과 핵위협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지역국들은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조직 형성을 지지하고, 개발국은 미개발국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아·태 및 동북아시아가 지닌 다양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체를 형성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체와 신뢰구축 조치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29)</sup> 이와 관련, 중국은 각 소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역내 小地域 차원의 兩者 및 多者안보협력체를 형성하거나 역내국가 지도자회의 및 상호 방문의 정례화, 정보교류 채널 구축, (잠재적) 분쟁지역에 대한 신뢰구축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sup>30)</sup> 이는 아직 지역 강대국 지위에 머물고 있는 중국이 아·태

---

29) 중국은 미·소 양대 군사집단간 대립으로 갈등을 겪어온 유럽과는 달리 아·태 지역은 강대국간 갈등 이외에도 지역국간 대립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광범성과 문화적 다양성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江澤民, “中日關係和國內外大事,” 「人民日報」, 1993. 8. 9; 陳啓懋, “關於在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探索,” 「國際問題研究」, 1992年 第1期(1992. 1), p. 8; 梁于藩, 陳佩堯, 앞의 글.

30) 이와 관련,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클린턴이 제안한 시애틀 아·태경제 협력회의 비공식 지도자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다자협력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1989년 천안문사건 이래 경색되어 왔던 중·미관계가 완화되는 추세에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안보협력체를 구축할 경우 미국의 主導權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역내 안보협력 방안으로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지역포럼」과 미, 일, 중, 러 및 남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안보협력체 형성 구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南沙群島 영유권문제 등 南中國海와 동북아시아가 아·태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잠재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 형성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세안지역포럼」을 주도하는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同 構想이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추구 가능성과 일본의 역할증대를 견제해야 하는 중국의 정책목표와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南沙群島 영유권 문제가 중국과 동남아국가간 현안이 되고 있는 바,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南沙群島 영유권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31)</sup> 아울러 아세안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유사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

있고, 이는 또한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이 역내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안보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도 그러하다.

31) 杜若洲, “評亞洲區論壇的成立,” 「文匯報」(香港), 1993. 7. 27. 아울러 국제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중국은 南沙群島 영유권문제와 관련한 유관국과의 갈등을 잠시 잊혀두고 공동개발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文匯報」(香港), 1993. 4. 27.

점에서도 그러하다.

중국은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논의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32)</sup> 이는 중국이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질서 안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를 견제하고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함으로써 同 문제로 인한 중국의 난처한 입장을 탈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아울러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은 자신이 동북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에서 4강의 이익이 첨예하게 교차되고 있고 상호 信賴基盤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안보협력체가 구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주변정세 안정을 바라는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통해 지역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역내 다자안보협력체가 미, 일 등의 주도하에 中國을 牽制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평화공존 5개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역내의 多樣性和 상호 排他性を 고려하여 양자간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2) 이에 대해서는 Li Cong, "Some Views on the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3회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3. 10. 18, pp. 50-52 참조.

## V. 結 論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아정책이 對立보다는 協力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통해서 볼 때, 중국은 동북아 안보에 安定維持 세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미국이 시애틀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1989년 天安門사건 이래 추진해 온 對中 강경정책을 수정하여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중국이 인권문제와 무기수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양보조치를 취할 경우 1994년 클린턴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있는 등 미·중관계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sup>33)</sup> 또한 중·일간에도 安保會談 개최(12. 20)를 계기로 상대방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등 안보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일협력관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발전 지연 등 역내 긴장요인으로 계속 남게 될 가능성도 있으나, 1994년 동북아에서는 대체적으로 葛藤要因이 완화되고 역내국가간 協力 霧圍氣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내질서의 多極化 추세는 한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관계과 중·일관계의 진전 그리고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 및 정

---

33) 시애틀 정상회담시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클린턴에게 1994년중 訪中을 초청한 바 있다. 「文匯報」(香港), 1993. 11. 21.

치·안보부문에서의 협력 모색은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대외 개방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거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994년에는 역내국가간 地域紛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 논의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역내 다자안보협력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그 동안 同 構想을 미국이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말살하고 이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여 온 북한도 지역안보협력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대외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역내 다자안보협력 논의를 對美關係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sup>34)</sup>

역내 국가간 다자안보협력 논의의 진전은 현재 아·태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南沙群島 영유권문제 및 역내 군비경쟁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국가간 신뢰를 공고히 하여 지역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문제의 國際化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한반도 平和體制의 국제적 보장 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일을 필두로한 역내국가간 군비경쟁, 북한 핵문제, 南

34)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리석윤, “무엇을 위한 《전아세아안보협조회의》 창설구상인가,” 「로동신문」, 1993. 3. 13 참조.

沙群島와 북방 4개도서 등 영토문제, 러시아 내부정세 불안 및 중국과 북한의 權力承繼 과정에서 초래될 혼란은 1994년에도 동북아 정세 및 한반도 통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對南戰略 分析 및 展望

全 賢 俊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목 차

- |                |                      |
|----------------|----------------------|
| I. 서론          | Ⅲ. 북한의 대남전략 추진현황     |
| Ⅱ. 북한의 대남전략 기초 | 가. 북한내 혁명역량강화 추진     |
| 가. 남한에 대한 인식   | 나. 국제 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 추진 |
| 나. 대남혁명의 성격    | 다. 남한내 혁명역량강화 추진     |
| 다. 대남혁명의 방법    | Ⅳ. 전 망               |

## I. 서론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국가목표를 한반도의 사회주의화에 두어 왔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은 1950년 민주기지를 기조로한 '해방전쟁' 즉 한국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1953년 휴전후 북한은 전후복구사업기간 확보 및 정치적 내부정비 필요성에 의해 일면 평화를 내세우고 일면 무력에 의한 직접 통일방식이 아닌 '지역혁명론'에 입각한 남한혁명역량지원 방식을 대남전략 기조로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후 과도적연방제안, 고려연방공화국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 범민족통일국가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각종 전략·전술을 구사하였다. 북한의 대남전략 '주요타격방향'은

‘파쇼정권’, ‘반동관료배’들이었고 제휴대상은 노동자, 농민, 학생, 진보적 지식인, 종교인 등이었다. 물론 혁명의 주체는 북한의 인민이다. 그런데 이 인민의 범위는 누구든 ‘수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주체사상의 정수인 수령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의 최고엘리트들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인민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다.

1989년을 전후한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내 혁명역량강화를 위해 혁명세력에 대한 이념적 지원과 선전·선동을 계속하였다. 특히 1991년을 전후하여 북한핵개발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었을 때 북한은 민족대단결만을 강조할 뿐 남한정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통일전선에 역점을 두는 전략·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북한은 수령의 통일관련 ‘강령적 교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북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비자주적’인 남한정부를 ‘남조선의 극소수 반민족세력’으로 규정, 통일전략행위인 미국과의 ‘회담투쟁’에서 배제하였던 것이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몰락, 남한의 문민정부탄생, 경제적 곤경 등으로 인해 주·객관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남한정부배제 논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이 남한정부배제논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고찰하기 위해 첫째, 북한은 과연 남한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북한의 대남인식태도에서 발로된 대남전략의 기초는 무엇인가? 셋째, 대남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1993년도에는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졌는가? 넷째, 1994년에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분석을 위해 대남통일정책과 대남전략을 구별하였고 대남전략분석대상으로는 3대혁명역량강화론을 채택하였으며 전략과 구별하여 전술개념을 도입하였는 바, 통일전선전술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북한의 대남전략성공여부는 논외로 하였다. 한편 분석대상은 북한의 의도가 나타난 대남전략관련 문건, 방송문 등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문자나 언어로 나타난 선전과 사실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글의 분석결과도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아울러 당위론적 접근은 피하고 사실판단적 접근에 비중을 두었다.

## II. 북한의 대남전략 기초

### 가. 남한에 대한 인식

북한은 남한정권을 근본적으로 미국의 '(신)식민지적 예속파쇼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sup> 북한은 남한을 '미제의(신)식민지'로 규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 침략적이며 약탈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한을 강점하였고 둘째, 미국은 남한이 갖고 있는 군사전략적 위치때문에 동북아 침투를 위한 군사전략기지 내지는 병참기지화하기 위하여 남한을 강점하였으며 셋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위기 특히 군사화된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강점하였다고 주장한다.

1) 손종철,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 예속성과 기형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5.

이러한 이유로 ‘남조선 경제는 민족산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심한 기형성과 편파성을 띤 절름발이 경제’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국민들은 ‘미제의 착취’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한이 ‘식민지노예’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역대 남한정권은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충실하게 지지·성원한 ‘비자주 예속파쇼정권’이었고 현재의 문민정부도 예외는 아니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문민정부도 근본적으로는 타도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문민정부에 대해서 북한은 김영삼대통령의 민족우선발언, 이인모송환 등으로 인해 긍정적 평가를 했으나 핵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미국과의 국제공조체제를 강조하자 김영삼정권을 이전 정부와 비슷한 ‘파쇼’라고 비난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비자주적인’ 남한정부를 철저히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필요한 전술적 하위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1993. 8. 27~29일간 「평양방송」을 통해 한국의 통일방안을 ‘5, 6공 통일방안’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남북연합단계는 2개국가의 교착론이고 남북관계를 국제적으로 합법화된 국가간의 관계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였다. 즉 3단계통일방안은 승공·흡수통일방안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박성철 부주석은 「로동신문」(1993. 4. 12.)을 통해 “현 남조선 당국이 과거의 예속적인 군사파쇼정권과 다른 자주와 민족적 단합을 지향하는 <문민정권으로 되자고 한다면 우리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제기한 것처럼 외세의존정책을 포기하고 미군철수의지를 표명하며 외국군대와외의 합동군사연습을 영원히 중지하고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성철은 “...남조선의 반민족세력이 민족대결책동에 매달림으로써 우리 겨레는 대국들의 희생물이 될 엄중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여 ‘반민족세력’을 원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민족세력’이 누구인가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남한의 ‘파쇼정권’이 ‘미제의(신)식민지정책’에 동조하여 노동자, 농민, 학생, 진보적 지식인들을 억압·탄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의 타도를 위해 ‘반파쇼민주화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대남혁명전략의 성격

북한은 ‘미제의(신)식민지’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이 생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남한에서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와 노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주아, 민족자본가’간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첫째, ‘미제국주의’를 몰아 내고 둘째,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그 중에서도 ‘미제국주의’를 제1의 주요타격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타격을 하는 주체는 북한의 인민이다. 그런데 이 인민의 범위는 누구든 ‘수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주체사상의 정수인 수령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의 최고엘리트들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인민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불어서 수령만 인정한다면 계급, 계층, 민족 ‘반역자’, ‘파쇼’ 등 누구든 막론하고 ‘용서’하겠다는 뜻을 「조국통

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하 「10대강령」이라 함)<sup>2)</sup>에서 밝혔다. 즉 수령론과 이에 입각한 북한 체제를 지지만 하면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있고 ‘반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어쨌든 북한은 ‘남조선혁명은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의 기초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두고 있다.

물론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우선 순위는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지난 4월에 제시한 「10대강령」은 ‘민족해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전술로 생각된다. 즉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상황을 국가자체를 빼앗긴 일제시대 상황으로 인식하고 ‘반미자주화’에 치중하기 위해 전술적 ‘휴전’을 제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다. 대남혁명의 방법

북한은 혁명에는 두가지 ‘전도’(방법)가 있다고 한다. 첫째, 평화적 통일방법이다. 이것은 ‘남북사이의 신뢰와 전민족적 단합에 기초하여 전쟁이 없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평

2) 「10대강령」은 첫째, 전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목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 창립이라고 설정하고 둘째, 민족대단결의 기초로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그리고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공존·공영·공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 모든 정치적 논쟁의 중지, 다섯째,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 해소 여섯째, 민주주의 존중과 달리하는 주의·주장에 대한 배척증지 일곱째, 개인 단체의 물질 정신적 재산보호 및 민족대단결에의 활용 장려 여덟째, 접촉·왕래·대화의 실현 아홉째, 남·북·해외의 전민족의 연대성 강화 열번째,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평가 등이다.

화적 통일방법중에는 첫째, 남한이 국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3대원칙<sup>3)</sup>과 5대방침<sup>4)</sup>을 접수하고 실현하는 경우이다. 둘째, 남한에 반제자주적인 정권이 등장하거나 남한이 중립화되는 경우이다. 셋째, 그리고 남한에 혁명역량이 강화되어 남한혁명이 승리하였을 경우이다. 남한혁명이 승리한 후 북한의 사회주의역량과 남한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전략적 배합에 의한 통일은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북한은 주장한다. 남한혁명은 폭력적 방법이지만 남한혁명이 승리한 기초

---

3) 통일3원칙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주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한국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또한 민족자결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통일문제를 민족자결권으로 분류하고 “그 어떤 외세도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조선인민만이 자신의 손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자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우리나라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저지파탄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자주성 원칙의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철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민주주의적원칙과 평화적방법은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한 남북 총선거를 통해 사회정치제도를 결정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해 통일한다는 논리이다. 우선 민주주의적원칙은 남북간 상호 다른 체제와 이념을 하나로 묶기 위한 통일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 민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은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제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남한의 민주화이다. 남한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주성과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한반도통일은 반제사상을 전제로 하고 통일의 기본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민족적 투쟁을 필수적 요구로 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이행’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 원칙은 상호비방증상과 민족간의 화목과 단합을 훼손하는 선전을 중지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충돌의 중지를 포함한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셋째,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은 “전민족이 반미구국의 기치 밑에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추월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

하에서 통일하는 것은 평화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혁명력량이 비  
상히 강화되고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과 세계혁명력량과의 전투적  
뉴대가 끊길 수 없이 견고한 것으로 될 때만이 외세는 조선에서 쫓  
겨나고 매국배족의 무리들은 청산되어 조국통일문제는 비로소 자  
주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에 의하여 해결될수 있다”고 말하였다.

둘째, 비평화적 방법은 전쟁에 의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쟁에  
의한 방법 중 첫째는 미국이 침략하여 왔을 때 이것을 격퇴하고 통  
일을 이룩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이것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었을 때 자체의 힘으로 ‘미제’를  
타도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이다. 즉 ‘미제’가 제국주의전쟁을  
일으키든가 제국주의전쟁에 휘말려 힘이 약화되었을 때 남침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남한에서 혁명정세가 성숙되어  
남한국민들이 북한의 지원을 꼭 필요로 할 때 지원하여 통일을 이  
룩하는 것이다. 즉 남한에 내전이 발생하여 북한의 힘을 필요로 할

---

성에 기초한 단합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 “은 민족이 반미구국투쟁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야 한다”는 것, “외세의 간섭을 몰리치고 자주  
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 “서로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하며 호상존중하고 신임  
하는 원칙에 서야 한다”는 것, “자기의 사상과 리념,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이다. 결국 「통일3원칙」은 주체사상의 기본논리를 구체화  
한 것으로서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강령이 되고  
있다.

- 4) 5대방침은 첫째, 남과 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둘  
째,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셋째, 대민족회의의 소집, 넷째,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의 실시 다섯째, 단일한 고려연방공화  
국의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다.

때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물론 북한은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 모두를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 Ⅲ. 북한의 대남전략 추진현황

북한은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전원회의를 통해 통일전략으로 ‘3대혁명역량강화론’을 채택하였다. 김일성은 “우리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물론 3대혁명역량강화론의 시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시의성문제는 북한의 판단과는 별개의 우리의 주관적 판단문제이다. 즉 북한이 어떤 명백한 성명을 통해서도 이것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 전략을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통일전략을 3대혁명역량강화론으로 인정하고 논리를 전개하려 한다.

## 가. 북한내 혁명역량강화 추진

김일성은 주체의 혁명역량은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과 남한의 민주주의역량으로 구성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은 주체의 혁명역량 가운데서 북반부의 혁명역량이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남한의 혁명역량은 보조적 역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통일세력'까지도 한반도 통일의 주체가 아닌 보조역량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국제혁명역량강화를 위한 행동에 있어서 북한이 대표가 되고 남한은 보조역할을 해야한다고 북한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대표적인 예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이다.

한편 북한은 북한내혁명역량강화를 위해 정치적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의 세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은 수령론에 입각한 주체사상을 강화하는 것이고 경제적 역량은 자립적 사회주의건설을 달성하는 것이며 군사적 역량은 4대군사로선을 견지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 1993년도에 북한내혁명역량강화를 위해 취한 각분야의 정책을 고찰해 본다.

첫째, 북한은 정치역량강화를 위해 김정일승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김정일은 예정된 승계구도에 의해 국방위원회 위원장(4.9)에 피선되었다. 이로써 김정일은 국방위위원회 제1부위원장(1990), 인민군최고사령관(1991), 공화국원수(1992)에 이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군권에 관한 모든 직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항일무장투쟁을 북한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항일빨치산과 그 후예인 군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군권의 완전장악은 승계구도 완성과 관련해 그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993년도 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김정일 권위강화에 집중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은 「한·미 팀스 피리트훈련」과 관련,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준전시상태’를 하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그동안 의혹을 받아 왔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군지휘능력을 인정받았다. 둘째, 김정일은 핵사찰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NPT탈퇴(3.12)라는 강경책을 통해 정면돌파함으로써 미국과 직접협상의 길을 모색,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켰다. 셋째, 김정일은 ‘전승기념 4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 원로군관 99명(중장 14, 소장 85)을 승진(7.19)시킴으로써 원로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충성을 유도하였다. 넷째, 김정일은 군·민일치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등 8개지역을 선정하여 「군·민일치 모범군·시·구역 칭호」를 부여하였다. 다섯째, 김정일은 각종 매스컴에 의해 인덕정치·광폭정치의 소유자로 칭송되었고 孝誠花를 새로 재배, 전국적으로 보급하였고 김일성이 1992년에 김정일 50회 생일축하 선물로 지어준 송시를 碑로 만들어 백두산 밀영에 세웠다. 여섯째, 김정일은 승계를 위한 아킬레스건인 친·인척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김영주를 제6기 제21차 당중앙위전원회의와 제9기 6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치국위원과 부주석으로 복권시키고(12. 8, 11) 김성애를 공식석상에 등장시켰다(11.15). 이로써 김일성 사후 발생할 수도 있었던 친·인척 반발을 사전에 불식시켰다.

둘째,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고 외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및 「합작법」을 제정하고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한데 이어 1993년 1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환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기술과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1월 5일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토지의 50년 임대, 세제상의 각종 혜택, 이윤의 국외 송금 등 매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11월 24일에는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외국은행설립과 지점개설등을 허용하였다. 12월 7일에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출입규정」을 만들어 나진·선봉지역을 사증없이 초청장만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북한은 경제력강화를 위해 사회주의권인 중국과 구사회주의권인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1993년 상반기 중 북한의 대중국무역은 4.3억달러로 1991년 동기에 비해 39% 증가되었고 대러시아 무역규모(1~4월 중) 역시 2.2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40% 증가)에 달하는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내경제 강화를 위해 김일성은 「현지도」를 통해, 김정일은 「실무지도」를 통해 농업, 경공업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12월 8일 국내경제통인 홍석형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한 것도 국내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포석일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1993년은 북한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된 한해였고 북한도 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 후 경제침체를 시인하고 “지도부는 일정기간의 조정기를 갖고 농업, 경공업, 무역부문을 최우선을 두어 활성

화하기로 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즉 북한은 1993년까지 대외 무역관련법 정비를 완료하고 1994년 부터는 적극적 대외개방 실시를 공식화하였다.

셋째, 북한은 군사역량강화를 위해 미사일개발과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와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사정거리 1,000km인 노동1호 개발에 성공(1993.5)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사정거리 2,000km인 노동2호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도에 비해 군단 1개, 사단·여단 8개, 전차 100대, 각종 포화 500문, 함정 30척 정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사훈련 측면에서도 북한은 1990년대 전반적인 감소추세와는 달리 1993년에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은 군사역량강화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핵무기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현재까지 핵무기개발능력 또는 2~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5)</sup>

## 나. 국제 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 추진

북한은 국제적 혁명역량은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의 혁명에 대한 국제적지지성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한다. 국제혁명역량은 사회주의역량과 제3세계발전도상국, 민족해방역량과 자본주의세계의 노동운동, 그리고 반제적평화에호

---

5) 1993년 3월에 발표된 KGB보고서에 북한이 첫번째 원폭장치 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6~7개의 핵무기가 실전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일원 정보분석실, “미하원산하 공화당 연구위원회가 1993년 7월 14일 발표한 북한핵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서,” 「시사정보 93-11」, p. 2.

역량 등이라고 북한은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북한은 친선정책을 통해 서방세력의 대북국제공조체제의 약화에 주력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와의 역량강화, 특히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하였다. 김일성은 '전승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방문한 중국대표를 위해 특별히 연회를 개최했고(7.28), 중국 정권수립 44주년(10.1)을 맞이하여 김일성과 강성산총리는 江澤民 총서기 겸 국가주석, 喬石 全人代상무위원장, 李鵬 총리 등 중국 당·정 수뇌부 앞으로 축전을 보내 우호관계 지속을 도모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변경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한 제재를 강력히 반대하는 등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국제혁명역량강화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미국의 강경책을 완화시킨데 있을 것이다. 즉 가장 강력한 반통일세력이라고 평가한 미국과 비록 핵문제를 매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물론 직접 대화를 택한 이유는 미국중심의 자본주의가 1989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 세계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에 대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즉 세계적인 헤게모니국인 미국과의 담판만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한반도통일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3. 12)한 후 협상과 압력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6월 2일부터 제1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6. 2 11)하였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은 배제한다는 논리를 견지하였다. 물론 그것은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에 대한 사전 봉쇄의 차원이었

다. 제1단계 회담을 통해 미·북간에는 북한이 NPT탈퇴선언을 유보한 대가로 첫째, 북한에 대한 무력불사용 둘째, 상호 내정불간섭, 셋째, 평화통일 지지 등이 합의되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 필적할 만한 큰 성과였다. 이후 북한은 미국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이 성명에서 밝힌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북간에는 7월 14일 부터 제네바에서 제2단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7. 14~19). 이 회담에서 미국은 첫째, IAEA 핵사찰을 수용하여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둘째,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첫째,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과 둘째, 핵무기를 한국내에 배치 하지 않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셋째,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을 종식하고 넷째, 북한원자로의 경수로 전환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11월 11일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는 약속과 ‘북한은 핵안전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다짐을 동시에 교환할 것을 제의하는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현재까지 이 문제는 명확한 해결이 지워지지 않고 있지만 해결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핵카드를 사용하여 몇가지 이득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미국과의 직접협상으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시켰다는 점, 둘째, 북한은 핵강정책을 통해 체제결속을 강화하였고 김정일의 위기관리능력을 제고시켰다는 점. 셋째, 강경론도 없지 않지만 남한과 미국으로 부터 대북은건론을 유도하

였고 특히 중국의 온건론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각종 혁명역량강화 차원에서 핵사찰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핵카드놀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친선'수단으로 미군유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UN과 「유골문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키고(8. 24) 미군유해 33구를 11월 30일에, 12월 7일에 31구를 각각 미국측에 인도하였다.

#### 다. 남한내 혁명역량강화 추진

북한은 남조선혁명역량강화는 남조선인민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것은 혁명적 당을 강화하여 노동자, 농민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반미구국통일전선과 반파쇼민주연합전선을 비롯한 온갖 역량을 대중적 기반위에서 강화하여야 하고 '〈국군〉와해전취사업'을 잘하여야 한다는 논리라고 북한은 설명한다.

1993년도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는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밝힌 「민족자주의 입장」의 실천에 두어 졌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김일성은 NPT탈퇴선언(3. 12)으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 9기 5차회의(4. 7~9)에서 「10대강령」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의 동조세력 확보를 위해 남한측 인사들에게 편지공세를 펴고 각종 대남 선전성동 매체를 통해 「10대강령」 실천에 동참하도록 학생·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일전

선전술을 구사하였다.

「10대 강령」에 제시된 내용과 4가지 전제조건<sup>6)</sup>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나 민족을 강조하고 연방제용어가 아닌 연방제를 근간으로 한 「범민족통일국가」 창립 촉구 등은 변화의 징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향후 문민정부인 김영삼정권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전에도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수정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연방제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가는 방향으로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연방제방안을 수정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연방제방안의 수정의사표시는 남북관계 실무책임자들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노동당 비서이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윤기복은 1991년 5월 1일 IPU 평양총회 취재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통일과정에서 남북 지역정부가 잠정적으로 외교 및 군사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그후 6월 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한시해는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도 윤기복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 수정안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국가연합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7)</sup>

6) 첫째, 외세의존정책 포기, 둘째,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의지 표명 셋째,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훈련 영원히 중지, 넷째, 미국의 핵우산에서 탈피 등이다.

7) 諸成鎬,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 82.

그러나 북한 총리 강성산이 행한 「10대강령」제안 배경설명에서 여전히 「통전(통일전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무원 총리 강성산은 1993년 4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하였다. 그는 이 보고를 통해 “나는 지금으로부터 57년전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던 그 간고한 나날에 몸소 우리나라의 첫 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창립을 구상하시고 그 10대강령을 작성하신 그날의 그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으로 오늘 또다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친필하시여 온 민족에게 통일구국의 대강을 안겨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하여 「10대강령」이 조국광복회의 정신을 이어 받았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조국광복회는 1935년 김일성이 일본제국주의와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통일전선조직이었고 그 조국광복회는 행동강령으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채택하였는데 그 첫번째 강령이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고아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실현할 것”이다. 통일전선전술은 해방후 김일성이 취약한 권력기반을 극복하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전술이었다. 이후 김일성 국내권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통일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북한은 남한내 혁명역량강화를 위해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중요한 문제는 각계각층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 세우는 것입니다. 남조선의 인테리들과 청년학생들, 도시의 소시민들과 량심적인 민족부르조아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 군중은 통일전선에 망라되어야 합니다.” 또한 김일성은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군인 일반병사와 중하층 장교들을 중요시 하였다. 김일성은 “〈국군〉병사들과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 것은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고 말하였다. 결국 통일주체세력으로서 정부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북한이 「10대강령」을 발표한 이유는 적어도 국제환경적 조건이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투쟁을 했던 1930년대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모택동의 국공합작<sup>8)</sup> 전술을 원용, 위기타개를 위해 남한에게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입각, ‘미제’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산은 「10대강령」을 내놓은 이유를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날로 격화되는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전쟁위험이 더욱더 커가고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라고 밝히고 있다. 강성산은 전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우리 나라의 남쪽에 그 어떤 위험이 조성되면 북쪽이 안전할

8) 毛澤東은 1935년 「舉國一致·抗日鬭爭」의 기치를 내걸어 중국국민들의 절대적 호응을 얻었고 1936년에는 「西安事件」을 계기로 장개석의 국민당과 제2차 國·共합작에 성공하여 와해 직전에 활로를 찾았다. 金河龍, 「中國 政治論」 (서울: 博英社, 1990), pp. 43~44.

수 없고 북쪽에 그 어떤 불안이 강요되면 남쪽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고통도 같이하는 것이 바로 북과 남의 우리겨레, 우리 민족입니다”고 말하여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3대원칙으로 정한 이래로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은 무엇인가? 70년대와 90년대에는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 주장한 민족주의는 김정일이 발표한 「우리민족제일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성격을 띤 저항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10대강령」을 통해 민족대단결을 강조한 이유는 남한도 북한의 ‘민족의 태양 이신’ 김일성 휘하에 뭉쳐 미제와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통일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북한이 김일성 신년사에서 밝힌 「민족자주의 입장」을 근간으로 한 「10대강령」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NPT탈퇴 이후 긴장된 국내외적 환경을 일신하고 세계에 산재해 있는 혁명역량들에게 새로운 투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즉 첫째, 국내적으로는 각종대회를 개최, 주민들의 통일열기를 고조시켜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고 둘째, 대남적으로는 핵문제로 야기된 국제적 압력을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남한과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의도에서 였을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압력에 대해서는 모든 한민족의 역량을 집중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10대강령」과 이 강령 실현을 위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것을 한국의 정부 및 각계 각종 단체·인사들에게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민족 대단결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은 「범민련」과 「범청학련」을 통해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였다. 「범민련」은 5월 29일과 30일 북경에서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광복절을 기해 서울에서 제4차 범민족대회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당면투쟁과업」과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통일전선투쟁을 강화하였다. 「당면투쟁과업」은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첫째, 민족대단결 실현투쟁의 확산 둘째, 주한미군·핵무기 철폐 및 대북 핵압력·제재 저지 셋째, 한국의 국가보안법·안기부법 철폐 넷째,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 도출 다섯째, 「범민련」 조직확대 및 남측본부 결성 등에 대한 투쟁 강화 등이다.

「범청학련」도 5월 29일 「한총련」소속 학생과 북한 조선학생위원회 및 청년대표 사이에 전화통화로 제1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진행, 판문점회담 개최(6. 12)에 합의하고 전민족대단결에 입각한 연방제통일과 민족대단결, 통일의 장애물 제거와 「범청학련」의 조직강화 등을 결의, 투쟁의 적극 전개를 다짐했다. 결국 「범민련」과 「범청학련」의 「투쟁과업」과 「결의문」 등에서 드러난 투쟁목표는 민족대단결 실현 투쟁과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폐, 대북 핵압력 제재 저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 기구가 기본적으로 연방제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인 「10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하부기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10대강령」은 「범민족 통일국가」 창설(제1항)과 「공존·공영·공리」 원칙(제3항)을 전면

에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범민련」의 「당면투쟁과업」은 바로 연방제통일 실현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인 것이다.

또한 북한은 5월 27일 부터 고려대학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에 「범청학련」 북측본부 명의의 전문을 보내 「한총련」의 출범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학생조직들의 조직적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획기적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하면서 「한총련」이 앞으로 북한 및 해외동포 청년학생들과 범청학련의 대오에 굳게 뭉쳐 “애국투쟁의 기수, 돌격의 나팔수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축전은 이어 “미제와 분열주의자들이 우리에게 강도적인 특별사찰을 강요, 조국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녘의 전체 청년학생들은 남녘의 청년학생들과 함께 민족자주성에 기초한 전민족대단결로 통일조국의 새아침을 안아올 굳은 결의와 확신에 차있다”고 강조, 한국청년학생들의 반미·반정부 투쟁을 독려했다.

한편 북한은 특사교환문제 등 정부간 접촉은 도외시한 채 비정부간 접촉은 계속하였다. 즉 북한은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이효재, 윤정옥 공동대표 등의 북한방문을 허용(11. 6~8)하였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이강평 명예총무를 10월 24~25일 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동아시아게임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였으며 서울에서 개최된 UNDP 주최 「두만강개발 제2차 산업자원분야 워크숍」(11. 8~10)에 황정남(대외경제추진위원회 과장) 등 2명의 북한대표를 참석시켰다. 이것은 비정부간, 국제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북한은 문민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군부파쇼 무리들의 집합체인 민자당에서 나온 대통령 당선자가 문민정치를 고아대도 그것은 파쇼정치외에 다른 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3월 1일자 「더욱 높이 들자 투쟁의 기치를」 제하의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단합하여 미제와 괴뢰도당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 등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특히, 북한은 「로동신문」 6월 8일자 논평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이 한총련의 과격시위를 거론,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기도를 드러낸 것으로 현정권이 역대 정권과 다름없는 파쇼정권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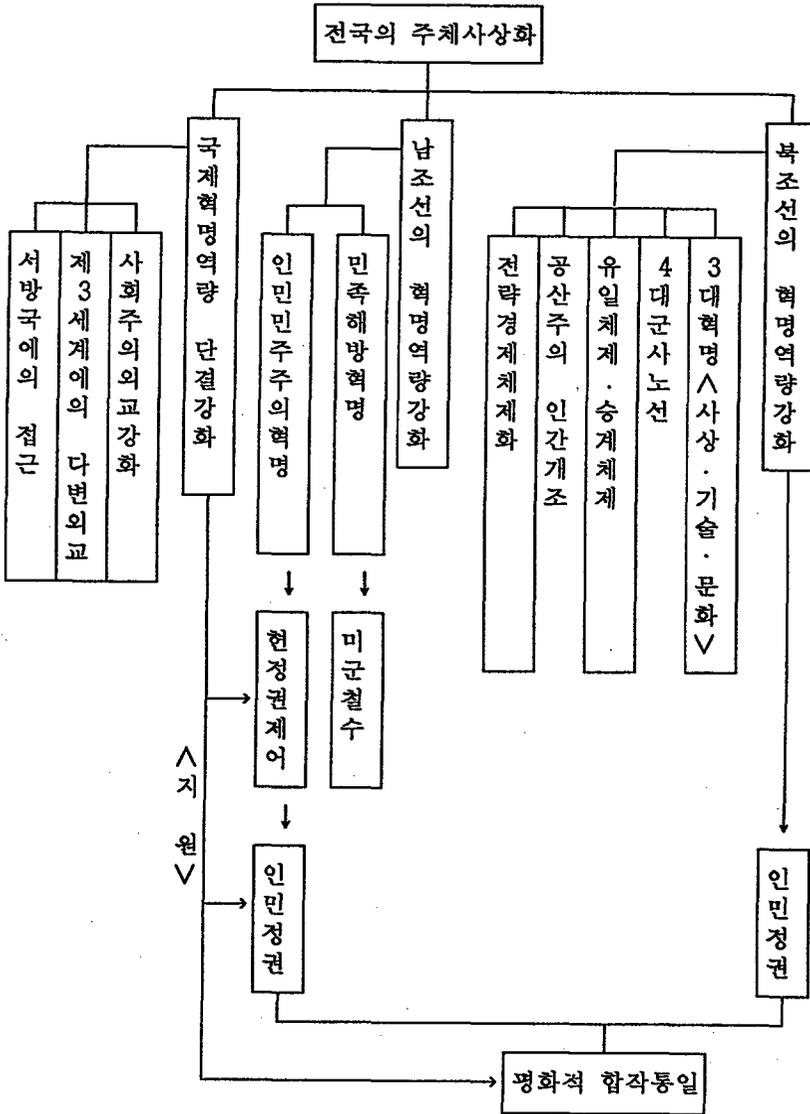
한편 북한은 남한의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조선」을 통해 “남조선농민들이 생사를 걸고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선동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의 쌀시장개방책동은... 용납할 수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따라서 1994년에는 쌀시장개방문제가 북한의 대남전략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종래의 대남통일전략의 구도아래 한국정부를 ‘파쇼정권’으로 규정, 「남북고위급」회담을 외면하고 역으로 「특사교환」을 제의하였으며 이것조차 전술용으로 사용할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범민련」, 「범청학련」과 같은 대남통일전선조직을 통해 김일성이 제기한 「10대 강령」 실현 투쟁에 주력하는

2중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의 대남전략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북한의 대남전략 체계도>



#### IV. 전 망

김일성은 ‘자주’에 대한 집착력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 즉 그는 개인적 경험에 의하여 ‘사대주의’를 싫어하는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그 자신이 자주적임과 북한이 자력갱생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김일성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비자주적’이라고 판단한 남한을 혐오하고 배제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남한이 자주적 국가가 되기를 촉구하는 일방 상대적으로 ‘자주적’이라고 생각한 재야운동권을 보다 선호하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김일성의 의지는 3대혁명강화론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의 3대혁명역량강화론과 그 실천상황들이 지니는 의미를 1993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내 혁명역량강화 차원에서 북한은 수령론에 입각하여 김정일의 위상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군권장악 마무리를 위해 지난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시켰다. 이와함께 김일성은 김정일승계과정의 아킬레스건인 친·인척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2월에 김영주를 당정치국위원과 국가부주석으로 등용하였다. 물론 이것은 김정일승계와 관련 긍정·부정 양면의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김정일 권력공고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역량강화를 위해 「토지임대법」을 비롯한 각종 개방관련법안을 제정하였고 농업, 경공업발전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였다. 한편 군사역량강화를 위해 사정

거리 1,000km인 노동1호를 개발하였고, 사정거리 2,000km인 ‘로동 2호’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핵개발에도 큰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각종 재래식무기 증강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둘째,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선린관계유지에 부심하였고 구소련과의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북한은 ‘주요타격방향’인 미국의 대북강경태도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문제로 미국과 ‘대화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다목적일 수 있으나 대미수교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어떤 형태로든 제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북한은 남한내 혁명역량강화를 위해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였다. 즉 북한은 문민정권을 ‘5, 6공’의 연장인 ‘과쏘’로 규정하고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등에게 정권타도를 선동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농민들의 투쟁을 선동하였다. 특히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 민족대단결을 통한 외세와의 투쟁을 강조하였다.

한편 1993년까지의 북한 대남전략의 공통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방안에는 항상 전제조건이 수반되었다. 즉 민주정부수립, 주한미군철수,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등이었다. 둘째, 자주는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셋째, 어떤 회의를 주장하든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각계·각층, 각정당 등은 반드시 포함시켰다. 넷째, 최근 수령론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수용을 전제로 한 민족·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다. 여

셋째, 상대적이긴 하지만 ‘대내 대남강경, 대외유연’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兩金(김일성·김정일)」이 있는 한 1994년도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은 남한정부를 동반자로 인식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타도대상을 전제로 대미 접근을 위한 전술적 제휴대상으로만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10대강령」에서 제시된 「범민족통일국가」의 실현을 위해 민족대단결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즉 중국의 국공합작과 같이 전술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남한정부를 통일세력으로 포함, 각계·각층을 망라한 「범민족통일국가창립협의회」 구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문제를 포함하여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북압력 회피용으로 특사교환협의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자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주적’인 학생, 노동자, 진보적 지식인들에 대한 「통전」을 지속할 것이다. 즉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등에 대한 이념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1994년에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 이들에 대한 선전·선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북한인민들을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민족허무주의에서 탈피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 주고 남한에 대해서는 소위 ‘자주국가’인 북한과 수령에게 동조하도록 하기 위해 ‘단군조상론’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단군학술조사단」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폐지를 주장하고 범민족화합 차원에서 양심범 석방과 비전향장기수들의 복송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첫째, 북한경제의 곤란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실질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나 북한내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여 신집권세력이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또는 김정일이 전권장악 후 전향적인 대남정책을 채택 할 때,

둘째, 남한내 문민정부의 민주화가 가속화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운동권이 대정부투쟁을 포기 할 때 또는 남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영구중지 내지는 단계적 미군철수 발표 등 전향적 조치를 취했을 때,

셋째,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과정에서 한국과의 정상적 관계유지를 필수 전제조건화했을 때 또는 중국이 대북 경제원조개선으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히 요구 할 때 등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은 첫째, '남조선해방전략'을 포기하고 남한정부를 그들이 주장한 연방제의 실질적인 지역정부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둘째, 최소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천하고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남한정부를 제휴의 대상으로 상정한 시기도 있었다. 즉 북한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술을 자유자재로 변화시

켜 왔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전술변화는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결국 이념자체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즉 공산주의 이론인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다 할지라도 양적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변화가 이루어지고, 전술적 토대변화는 이에 조용하여 상부구조 즉, 체제·이념, 국가 등을 변화시킨다는 맑스·레닌주의이론이 적실성을 갖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전술변화는 북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략변화를 야기하고 중국에는 이념과 체제를 변화시키는 상황으로 진전될 것이다.

#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金 道 泰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目 次

- |                    |                   |
|--------------------|-------------------|
| I. 서론              | Ⅲ. 남북한 관계 분석 및 전망 |
| Ⅱ. 남북한 관계 현황       | 가. 남북한 관계 분석      |
| 가. 남북 양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 나. 전망             |
| 나. 남북간 주요 현안       | Ⅳ. 결론             |

## I. 서론

1993년중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核武器 개발문제로 인하여 긴장과 대립상태를 보였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로 해석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거부를 반복적으로 표시해 왔으며, 한국은 이를 容納할 수 없다는 態度를 견지하여 대립적 상황을 보였다.

1992년 9월 제8차 남북 高位級會談을 마지막으로 남북한은 남한이 주장하는 核相互査察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어 대화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8차례에 걸친 高位級會談을 통해 기대되던 남북간 和解 및 協力關係 구축 가능성을 무산시켰다. 특히 핵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난 남북간 대립상황은 남북관계의 不安定性

을 다시 확인시켰으며, 통일을 향한 남북주민들의 회원이 실현되기에는 요원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남북한 관계를 검토·분석하고, 1994년의 남북한관계를 展望해 보고자 한다.

## II. 남북한 관계 현황

### 가. 남북 양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1993년 2월 출범한 남한 신정부는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文民政府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통일문제에서도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사에서 民族于先主義를 표방하고 금세기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힌 것은 신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가 되었다.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신정부의 통일정책은 과정상으로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段階를 설정하고, 내용적으로는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3基調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은 기본구도상으로는 종래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實現性 제고에 중점을 두어 段階의 細分化 및 內容上의 民主化를 모색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3단계 통일과정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수립」이라는 2단계 과정에 「화해 및 협력단계」를 추가시킨 것으로, 현단계에서의 남북간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공존과 민족공영이라는 민족통

일의 當爲性을 분명하게 표출시켜 남북간 신뢰구축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한편 3기조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남북한 社會發展 방향제시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가져다 줄 民族利益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국민합의 기반조성과 민족의 공존공영 및 복리 추구는 민주화로의 발전심화와 인권존중, 사회복지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등 통일한국의 未來像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신정부가 새로운 통일정책을 제시한 것은 과거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조국 수립노력에 名分과 現實性을 추가한 것으로, 신정부는 통일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이 통일을 위해 추진하는 제 조치는 그 목적이 분명하며, 여기에는 북한이 어떠한 의혹이나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전제적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중 신정부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의 核武器 개발의사로 말미암아 남북간에 긴장과 갈등상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북 화해와 협력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를 알 수 있는 구체적 사례로는 통일원장관이 3월 15일 통일원업무 보고에서 南北交流協力 基金을 1995년까지 1조원으로 擴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사실, 3월 19일 미전향 장기복역수 이인모노인을 핵문제와 관계없이 人道的 次元에서 북에 송환한 사실, 문화체육부가 「문화창달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복50주년 기념 남북공동민속잔치’를 개최하도록 제의한 사실(7.23), 통일원장관 명의로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처를 남북이 함께 강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 사실(9.23)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1993년 1월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남한측에 대해 민족자주의 통일원칙과 고려연방제 통일론의 수용을 촉구(김일성 신년사. 1.1)하였으며, 4월 7일에는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소위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였다.<sup>1)</sup> 10대강령에서는 統一의 原則으로 민족대단결을 최상위에 두고 자주와 평화원칙을 고수하였으며, 통일방식으로는 聯邦制를 주장하여 종래의 통일노선을 그대로 견지하였다.

다만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는 한민족이 중심이되는 民族單位 革命을 통해 통일을 완수한다는 민족민주주의 건설을 주장하여 종래 계급중심의 소련식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이 변화되었음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북한은 종래 계급개념을 통해 남한정부를 부르조아 세력의 대표기관으로 분류하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던 것과는 달리, 민족개념을 적용하여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인정함으로써 남한정부에게 민족자주 노선 동참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대남정책의 戰術的 變化로 볼 수 있는 바, 남한사회 내의 반정부세력 약화로 말미암아 階級革命의 가능성이 줄어들게되자 남한정부를 상대로 하여 대남전략의 내용 변화 없이 형태적 전환만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북한이 소위 10대강령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條件으로 남한의 외세의존정책 포기, 주한미군철수 의지 표

---

1) 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의 목표 및 과정과 수단을 밝히고 있다. 내용은 1) 자주, 평화, 중립의 통일국가 창립,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 강조, 3) 공존·공영·공리원칙 존중, 4) 정치적 논쟁 중지, 5) 남북 상호 침략우려 및 불신 해소, 6) 상호이념 존중, 7) 개인 단체의 재산 보호 및 활용, 8) 상호 접촉·왕래·대화 실현, 9) 전민족의 연대성 강화, 10)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 평가 등이다. 「내외통신」 (주간판), 1993. 4. 15.

명,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을 제시함으로써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한데서 찾을 수 있다.

1993년 중 남북한의 통일정책 추진방향은 남한정부가 實踐的 統一政策을 선택한 반면, 북한정부는 종래의 통일노선인 남조선 혁명을 통한 赤化統一政策을 견지한데서 차이를 찾을 수 있으며, 양정부의 이러한 차이는 남북간 긴장상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나. 남북간 주요 현안

### (1) 남북대화

1993년 중 남북 當局間의 對話는 특사교환을 위한 3차례의 실무접촉만이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화단절의 상황은 북한이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회피하기 위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결과이다.

1993년 중 남북대화의 특징은 북한이 종래 남북한간 진행되어 온 남북고위급회담의 性格과 機能을 무시하고 남북대화의 새로운 방식으로 特使交換을 제의한 사실이다. 북한은 1월 29일 남북대화의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후 남한이 5월 20일에 핵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위 重大事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특사교환 방식의 접촉을 역제의하였다(5.21). 북한은 최고당국자가 임명하는 통일문제 전담 副總理級 인사를 특사로 선임토록 제의하였으며, 특사교환의 의의로는 「基本合意書」 및 「非核化共同宣言」 이행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남북간에는 수차례의 特使交換을 위한 수정제의 반복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특사의 格을 제한하지 않고 쌍방향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자 접촉을 조건없이 갖기로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10월 5일 처음으로 열린 실무접촉에서는 남한측이 特使交換 節次의 우선 합의를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절차문제를 제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核戰爭演習 中止와 國際共助體制 拋棄를 남한측에 요구하여 남한의 양보를 강요하였다.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은 10월 15일과 25일에 두차례 더 개최되었으나, 유엔총회가 북한의 核査察 受容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11.1)하자 북한이 이에 항의하고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4차의 실무접촉을 거부함으로써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처럼 1993년의 남북당국자간 대화는 실적없이 특사교환이라는 새로운 접촉방식의 가능성만을 제시한채 교착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특사교환이라는 남북간 대화방식이 북한의 대남 對話戰略의 다양화를 통한 남한교란술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특사교환제외는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도는 核問題에 대한 성격을 民族 內部問題化하여 국제압력을 회피하고, 공식적인 남북대화 기구인 南北高位級會談과 核統制共同委員會에서의 북한핵문제 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접촉은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이룩해 온 남한측의 대북 화해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동시에, 남북간 합의하에 正當性을 부여한 공식적 대화창구로서의 남북고위급회담

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향후 그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남북간 합의한 「基本合意書」와 履行機構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여, 남북간 대화의 진행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2) 핵문제

핵문제는 1993년의 남북한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 1992년 13차례에 걸쳐 개최된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에서는 남한의 相互核査察 제의에 대해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疑心同時 解消原則에 따라 미군사기지를 사찰할 것을 요구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IAEA 사실(1993년 2월까지 6차례 실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IAEA에 제출함으로써 핵무기개발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한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IAEA는 북한핵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NPT탈퇴 결정 재고와 IAEA의 安全協定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였다.(1993. 5.12)

따라서 1993년 중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IAEA, 그리고 유엔까지 관련된 국제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각 당사자들에 의해 多方面에서 이루어졌다.

미국과 북한은 2차례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는바, 뉴욕의 1단계회담(1993.6.2~11)에서는 NPT탈퇴에 대한 북한의 잠정적 留保決定을 도출하였다. 제네바에서의 2단계회담(1993.7.14~

19)에서는 북한의 核安全協定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이 약속함으로써 북·미간 3차회담 개최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회담 先決條件인 IAEA와의 협상 및 남북대화 재개에 성의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3단계회담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IAEA총회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1993. 10. 11), 유엔에서는 북한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1993. 11. 1)

결국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 IAEA 査察을 수용하고 남북회담 재개에 동의함으로써 북·미간의 3단계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핵문제해결을 위한 방식으로는 북한이 미, 북한 동시 상호조건을 수용하는 一括妥結(a package deal)을 주장하고, 한·미간에는 북한이 먼저 핵의혹을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접근(broad, thorough approach)을 통해 완전히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包括的 解決을 주장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경제교류·협력

1993년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은 북한 핵문제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1993년 10월말 현재의 南北間 交易 규모를 보면 승인기준으로 1억 7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하였다.<sup>2)</sup>

그러나 교역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남한기업이 원·부자재를

---

2)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통일원 교류협력국) 제19호(1993. 1) 및 제28호(1993. 11) 참조.

공급하고 북한이 이를 가공하는 임가공 교역은 1993년 중 괄목할 만한 증가를 기록하였다. 임가공교역의 事例를 보면 1992년 중 5건(44만 2천달러)이 성사된 반면, 1993년에는 5월까지 17건(243만달러)에 달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物資와 資本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교역확대가 어려운 상태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한편 경제면에서의 人的交流는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된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쌍무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저조한 접촉상태는 정치·군사적 남북관계의 경색에서 연유하였다. 따라서 1994년의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의 확대 여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 (4) 사회·문화교류

1993년 중 社會·文化分野의 남북한간 교류·협력도 1992년에 비해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1991년의 경우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사례가 89건에 956명이었으며, 1992년에는 37건에 609명이었으나, 1993년에 이르러는 9월말 현재 22건 160명에 그치고 있다.<sup>4)</sup> 또한 감소하는 교류추세에 따라 1993년에는 사회·문화측면에서 직접 방문교류가 성사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sup>5)</sup>

1993년 중 한국정부는 核問題 解決과 南北關係改善을 연관시키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3)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 19호 및 제 24호 참조.

4) 「월간 남북교류 협력 동향」, 제 19호 및 제 27호 참조.

5) 1993년 남북간 직접교류 성사 사례는 이효재 등 2인이 평양에서 11월 7일과 8일에 개최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국제토론회」에 참여한 사실이다.

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확충계획과 이인모노인 복송사실에서 확인된다.

반면 1993년 기간에 북한은 사회·문화분야 교류에 대해 無關心 하였으며,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북한이 보여준 남북간 교류시도 사례는 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해 북측대표단 참여를 한국정부가 인정하도록 요구한 것과, 인도적 차원의 남북간 인간띠잇기 대회를 정치적 행사인 「범민족대회」 개최와 연결시키도록 요구한 것 등 政治的 目的을 내포하는 것들 뿐이었다.

#### (5) 이산가족문제

1993년 한해동안 한국사회내의 이산가족상봉에 관한 문제는 남북간 대화의 교착상태로 말미암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로 인하여 南北高位級會談이 중단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남북간에 협의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의 냉각상태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과 상봉하기 위한 대북주민 접촉신청과 성사사례가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 접촉허가 신청사례를 보면 1992년 267건에 비해 1993년에는(1월~9월사이 9개월간) 569건에 이르렀고, 성사건수도 1992년의 121건에 비해 1993년은 9개월 기간동안 181건에 달하여 이산가족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6)</sup>

이산가족 상봉이 증가한 것은 직접방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3

6)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19호 및 제27호 참조.

국을 통한 迂廻的 접촉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한국인의 중국여행이 쉬워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 Ⅲ. 남북한 관계 분석 및 전망

#### 가. 남북한 관계 분석

이미 살펴 본 바와같이 1993년중 남북관계는 전반적으로 긴장과 대립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직접적으로는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핵문제를 심화시킨 남북한체제내의 상황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고립상황이 遠因으로 작용하였다. 핵문제를 발생시켜 남북한 관계를 경색구도로 이끈 요인의 하나는 북한체제내의 權力構造變化이다. 김정일체제로의 실질적 권력승계과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체제는 김일성의 고령과 사회주의 몰락에 따른 국제사회변화로 인하여 김정일 後繼構圖가 보다 가시화되어야 하는 입장이며,<sup>7)</sup> 여기에는 김정일체제의 正當性을 제고시킬 적절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일의 후계구도를 합리화 시켜주는 구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을 통하여 북한사회내부의 統合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위상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내부 통합정도를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으로서는

7) 김정일 후계체제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민족통일연구원, 1992.12) 참조바람.

핵무기개발을 구실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사회내부의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의 체제지지 증대는 김정일체제의 正當性 제고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위상강화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되는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국제적 압력에 의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게되는 경우에도 북한으로서는 서방세계로부터 그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개발 포기에 따른 대가로 서방세계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양보조치로는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安全保障과 대미·대일수교를 통한 經濟支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로 말미암아 북한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체제안전을 강구해야 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북한으로서는 그들에 대한 선제 군사조치 절대불가의 약속을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의 북한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의 경제지원을 얻는 것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핵무기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關係改善이나 修交의 조기 성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이나 수교에 따라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지원은 김정일체제로의 이행구도에 하나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내에서 문민정부가 등장하여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배경으로 民主化와 經濟活性化를 추진해 온 사실도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경색상태로 이끌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신정부하의 남한사회

에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이 실천됨으로 인하여 소외되었던 계층이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추진해 온 남한혁명을 통한 祖國統一 戰略은 점차로 그 가능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북한은 더 이상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청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를 평화공세 수단으로 이용하여 남한사회를 혼란으로 유도하려는 기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과 함께, 對南戰略 次元에서 새로운 代案을 찾지 못하는 한 적극적인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제관계에서도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한·러수교 및 한·중수교, 한·미관계의 강화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남북관계를 경색구도로 몰고 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고립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처방안을 수립할 때까지 종래의 고립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핵무기의 개발을 추진하여 體制의 安定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나, 주변 국가의 견제로 좌절되는 그 어느 경우라도 그들의 핵무기 개발시도가 김정일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이유로 1993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야기시켰다고 보여진다.

## 나. 전 망

위에서 보듯이 금년중 남북한 관계가 긴장과 대립의 방향으로 돌아선 이유는 북한이 의도하는 다양한 정치·군사·경제적 상황변화 기대를 현실화시키려는 戰術的 次元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로 북한내부의 권력이양구조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節次問題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김정일에 대한 수령예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sup>8)</sup> 1993년 4월에 국방위원장이라는 중책이 이양됨으로 해서 김정일의 實權者的 위치가 거의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승계추세로 보아 당총비서직의 이양도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sup>9)</sup> 따라서 권력승계의 正當化를 위한 名分 확보가 역시 긴급하게 필요한 입장이라고 보여진다.

둘째로 북한경제의 불황심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1990년 이래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93년 중 발생한 냉해는 농업생산을 감소시켜 북한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

---

8) 1993년 1월 28일자 노동신문 논설에서는 김정일이 人德政治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하여 김정일의 통치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9) 평양방송은 1993년 10월 27일 보도에서 김정일의 후계자 내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1974년 2월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후계자 결정 20주년이 되는 1994년 2월을 전후하여 후계구도와 관련된 중요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제적 곤경은 북한내에서의 외국인 土地賃貸法 제정(10. 24), 외국 은행 영업허가(11. 24),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외국인 無비자여행 허가(12. 7) 등의 조치를 통해 이미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직접적으로는 최근 노동당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3차7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한 사실로 확인된다.(12. 8)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와 같은 장기간 경제불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북한에서는 식량폭동 및 생활고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일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김정일체제 등장이라는 계기를 통해 서방 및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이용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다만 북한의 변화는 북한식 社會主義理念 고수와 체제유지를 연결지어 좁은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세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차로 북한 開放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開放政策이 남한과의 관계강화로 나타나게 될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립을 초래하는 대중국 강경노선보다는 중국과의 타협을 통한 점진적 변화가 궁극적인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강경자세도 북한으로서는 단기간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게 될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제재가 실제로 구체적인 조치로 연결될 때 북한은 적절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현재의 핵문제가 주변국가들의 강경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점과 대미·대일 修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1994년에는 실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그 어느때 보다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1994년의 남북한간 주요현안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일 수 있다. 즉 남북대화의 재개는 물론, 여기에 편승한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部門의 交流·協力, 이산가족의 중국을 통한 상봉사례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각분야의 特殊性에 따른 부정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各懸案別 변화전망은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안별 상황을 세분하여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대화의 경우 1994년에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종래에 진행되어 온 남북고위급회담의 활성화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북한의 상황이 공개적이고 합의의 도출을 요구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수용할 만큼 安定的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사교환을 통한 남북간 접촉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을 높이고, 대화의 진행상황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압력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권력승계과정에서 체제불안정을 나타낼 수 있는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對話通路로 남북고위급회담보다 특사교환 접촉의 대화방식을 더 선호할 것이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남북한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實踐節次가 필요할 것이므로 남북고위급회담과 같은 공식회담의 효용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되고 고위급회담 및 부속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남북한간 구체적 현안문제(예로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게될 때, 북한으로서는 공식

적이고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가 타결되는 경우 經濟交流·協力分野에서의 관계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과거 증가추세에 있던 교역이 다시 증대할 것이며, 人的交流도 확대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필요한 하이테크의 지식과 정보를 남한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신정부의 통일정책을 고려할 때 자본과 기술의 협력을 남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북한이 對外貿易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본과 생산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外貨不足으로 購買力에 한계가 있으며,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후진적 生産能力으로 말미암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므로 남북교역의 급격한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금년중에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임가공 형태의 무역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경제분야에서와 같이 남북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1993년을 통해 나타난 남한측의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추진방향이 과거와는 달리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신정부는 이인모 노인송환에서 보듯이 명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讓步措置를 취함으로써 대북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자신감을 피력하였고,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 남북문화교류 3단계 계획과 같은 中·長期的인 대비책을 세워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방향설정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의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적극성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여전히 政治的 目的이나 核問題와 연계된 경직성을 보였다. 이 점에서 내년의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김정일체제의 후계구도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정보의 유입을 경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간 교류는 實用的이고 북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는 증대될 것이나, 순수학문과 예술처럼 실용성이 낮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한을 받을 것이다. 다만 體育이나 文化分野를 막론하고 제3국을 통한 교류는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94년~1995년에 걸쳐 아시안게임이나 동아시아경기와 같이 남북간 교류 및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의 남북간 相互訪問은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려우나, 남북대화의 재개로 고향방문단의 교환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이 남북간 主要懸案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김정일로의 승계과정에 놓여 있는 한 1994년 중 구체적인 남북간 합의 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한·중관계의 발전으로 중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을 통한 迂廻의 이산가족 상봉에는 否定的인 요소들이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의 반대로 악화되는 경우나, 북한 내부에서 권력승계문제로 體制不安定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이 주민의 중국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산가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남한정부의 입장을 불모로하여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을

통한 이산가족상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994년 중 이산가족문제는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상봉이 급진적으로 증대되는 경우 북한의 제한조치도 예상된다.

#### IV. 결 론

1994년의 남북한 관계는 남한 신정부의 적극적 자세와 북한의 불안정한 체제상황이 서로 상쇄되어 획기적인 改善과 發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주요 현안별 변화 가능성을 보면, 肯定的인 요소와 否定的인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관계는 현실적인 요소에 의한 수동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남한정부의 능동적인 정치적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에는 남북한관계의 발전이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진전될 소지는 있다. 핵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남북간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남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교류·협력 실천의 環境變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간에 놓여있는 현안문제들은 주로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들로서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일시에 상당한 수준으로 타결될 수 있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핵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經濟支援이 상당한 시간을 요구할 것이므로 북한의 당면한 경제난 해결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응해 올 수 있을 것이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남북한관계는 현재보다 더욱 첨예한 대립과 긴장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국가들로서는 그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북한 핵문제에 깊이 간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한의 입장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주체로서의 역할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주장하는 民族自主 統一의 原則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 김정일체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1994년 남북한의 과제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의사를 통한 남북간 대립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선택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남한으로서는 협조적 자세로 북한의 근경을 함께 해결하고 공존공영의 통일기조를 적극 실천해야 할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 Ⅱ. 綜 合 討 論

### 南北韓 關係 現況 及 情勢展望

빈 면

## 綜 合 討 論

### 토 론

사회자: 윤병익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황병무 (국방대학원 교수)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

곽태환 (켄터키대 교수)

사회: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순서는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국방대학원의 황병무 교수님, 한국일보의 이성춘 논설위원님, 그리고 곽태환 교수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제약 관계상 한분께 15분내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황 교수님 말씀해주십시오.

황병무: 감사합니다. 세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시간제약과 토론자 세분의 발표내용에 초점을 두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는 중국문제와 남북한관계에 국한하여 간단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진 박사님은 중국의 동북아 정책의 전망을 잘 분석해 주셨고 문헌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망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의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고 오늘의 제목이 '전망'이라 전망에 그쳤는데 정책대안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대중정책 방향에 대해 보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택동체제 이후부터 사회주의체제 변화나 붕괴 등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우외환’을 연동시켜서 말할때 항상 내우가 외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택동은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외부 자본주의 국가의 군사적 공격에 의해 붕괴된 경우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 당시 주요 정적을 제국주의보다 수정주의에 두고 이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문화혁명이라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등소평시대의 정책을 보더라도 주로 내우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현안은 경제력 향상의 문제이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박사님께서 외부 영향요소에 대해서는 잘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내부영향 요소 분석에 초점을 두고 향후 2~3년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룩할 것입니다. 중국의 변화를 예상하기 하기 앞서 내부적 영향요인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개방시대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북경의 정치 리더쉽간의 갈등·긴장관계가 증폭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개혁·개방시대의 진전으로 계층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사람들의 도시로의 유입과 생태계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형성에서 중국을 신권위주의체제의 등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안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따라 경제성장, 군부문제, 당의 역할, 이데올로기 역할의 축소문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기업간의 권한배분 문제 등에 있어 혹자는 중국의 분열과 새로운 민족주의 등장과 파괴를 염려하고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신박사께서 소수민족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현재 중국에는 36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들은 중국의 11억 인구중 8천만명 정도입니다. 그러데 이들 대부분은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소수 민족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티벳뿐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 해외에서 계속 티벳 분리·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달라이라마에게 모든 자유를 허용할 것이니 분리·독립운동을 본국에서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수 민족문제에 의한 중국의 분열 조짐은 없습니다. 셋째,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만과 홍콩문제가 있습니다. 홍콩은 97년을 기점으로 본토에 반환되는데 82년 협정을 체결하면서 등소평은 97년이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 기간동안 홍콩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방해공작에 대한 염려가 있을 뿐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2~3년내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징후는 없습니다. 대만문제의 경우도 다른 옵션중에서 UN가입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나 미국이 이를 트집삼아 미·중관계가 악화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인민해방군의 역할입니다. 이는 권력승계 문제와 리더쉽 위기시의 문제입니다. 특히 등소평 사후의 문제가 중요한데 과거 몇 십년의 역사를 보면 모택동사후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만 당중앙 지도부는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당의 통제나 정치권력의 핵심 세력이 통제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혹자는 국내 혼란과 지방의 분화

를 전망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체제화를 이룩하고 있는 북권지역이 중앙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그 지역의 해방군과 야합할 때 중앙정부와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방군의 제도화 과정을 보면 정치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에 있어서 군정과 군령권의 분리나 인민해방군의 분열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7대군구의 사령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인데 당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방군의 군벌화 혹은 해방군과의 야합에 의한 중국의 분열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대중정책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자간안보협력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실사구시'에 근거하며 최근 상당히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화란 과거의 외교정책의 패턴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행하면서 서방과의 외교적 교섭과 대화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다자간안보협력체 참여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최대 목표가 사회주의체제 유지인 만큼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지닌 국가와는 경제협력은 가능하나 다자간안보협력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화는 전술적 변화입니다. 다만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안보협력 모임이 있는데 중국이 빠지면 영향력 행사가 안되므로 이에 참여한다든지, 남지나 영토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여러나라가 들어오면서 국제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동남아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제

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대외관계 특히, 안보협력체 구상에 대한 참여를 고려한다고 분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안보협력관계 논의를 쌍무관계로 보아서는 안되며 동북아체제나 한·미관계, 중·북한간 안보협력문제 등을 고려하는 다자적 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관을 상호 교환하는 등 중국과의 안보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이 허용하는 우리와의 안보전략협의 범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입니다. 중국은 이 범위내에서 우리와의 협상에 적극성을 떨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관계유지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우리의 통일정책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으로 전현준 박사의 발표내용과 관련된 3대혁명역량강화 문제인데 ‘혁명역량’이라는 말을 지금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래도 안보협력과 대화를 유지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과 떨어진다면 북한의 행동에 대한 불예측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중국도 북한을 베트남과 더불어 사회주의권의 양날개로 인식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동북아 및 대북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중국은 영향력이 없으며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실력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50년대말부터 60년대초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을 당시에도 김일성은 연안파를 다 제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不關焉했습니다. 본인이 과거 중국의 안보관계 관료를 만났을때 ‘중국은 대국으로서 중화를 강조하면서 과거 청나라 시대에는 응징전도 했는데 요즘 북한을 다루는 것을 보면

형편 없더라'하고 비판했더니 그는 '오죽했으면 너희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견디기 어려웠으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만큼은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이상하겠지만 중국의 관여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대중국 인권외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인권개념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自家 撞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천안문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 그러나 그때에 대중외교압력과 제재조치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외교각서가 왔었습니다. 일본은 경제제재조치에 동참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중국과 간접무역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국경제제재에 참여하는 문제에서는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천안문사태가 발생할 경우 클린턴정부는 또다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고 우리가 선언한 정책과 미국과의 공조를 고려할 때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 이 문제가 남북한 관계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자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과 계속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도록 하여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정책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북한정권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는 입장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표현은 우리 정책에서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 내부의 보수파 그룹간의 연대강화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군부내의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강화에 주목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대강화의 중립화를 위해 우리는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북한 안보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중관계에서 고려할 점은 중국은 아직도 인치가 중요한 국가로 제도화가 덜 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중국내 친한그룹을 형성해서 합리화된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정보획득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한 두가지 코멘트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전현준선생의 발표내용 중 전망부분에서 ‘북한의 혁명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직도 혁명전략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신문에 보도되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에 빠집니다. 지금도 어느 신문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진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진다고 하는 War game속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때 초전에 화학무기를 쓸 경우입니다. 둘째, 현재의 전선은 종신방어가 안되는데 3차 방어선에 적어도 10여 사단의 예비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직 터널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북의 경보병 여단이 터널을 통해 기습 침투할 경우 우리의 방어선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자께서는 최악의 사태를 전망하면서 혁명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선언적인 정책 측면에 대한 분석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분단관리의 차원과 통일을 이야기 할 때에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전망부분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문제의 국제화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통일을 위한 대화의 분위기가 없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발국의 국제정치학도로서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치적 변수인 강대국의 논리가 아직도 지배적이라는 측면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94년의 전망도 이 문제 혹은 분단문제에서 벗어나야 통일문제로 넘어 오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남전략 변수 중에서 국내 정세의 변화 문제가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의 통일전략은 신정부의 국제화 전략과 민주화 전략에 맞물려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북한 전략이 예상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 황교수님께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성춘 : 감사합니다. 앞서 토론해주신 분께서 주로 중국관계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는 전현준 선생과 김도태 선생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 하고자 합니다.

두분께서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는 역시 대남적화의 완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방안은 통일전략이 아니냐고 봅니다. 물론 군사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북한이 온갖 전략을 구사하고 상화에 따라 변형시켜 왔지만 그 기조는 역시 대남적화전략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대로 1980년 10월 13일 다섯번째로 개정된 로동당 규약에도 최종 목적은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북한의 유일 정당인 로동당의 규약에서 이러한 기본 태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실천하는 전략이 아닌가 봅니다. 72년도 10월 15일에 채택된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조에도 앞서 말씀드린 로동당 규약의 기본 정신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4월 9일 9기 최고 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 채택한 북한 신헌법 9조를 보면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은 연방제 통일을 의미하며 결국 북한 방식에 의한 적화통일을 말합니다.

발표자분께서는 94년을 전망함에 있어 북한이 적극성을 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미접근을 위해서 '범민족통일국가창립협의회'같은 것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진보세력을 고무하는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통성 확립을 위해 김부자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선전, 대남관계로는 문민정부에 대한 공격과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폐지, 양심수 석방 등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북한의 6기 21차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주조를 보면 북한정권 처음으로 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주변정세 때문에 잘못됐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농업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등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일성의 실제 인물인 김영주를 부주석겸 정치국위원으로 승격시켜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전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지

적처럼 김부자체제 일족 내부의 마찰이나 갈등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저는 그 보다는 김정일체제를 더욱 보강·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봅니다. 물론 김병식의 경우는 일본, 특히 조총련과 관련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료됩니다. 잘 아시는대로 김영주는 50년대 남로당과 연안파를 숙청하는 데 앞장서고 60중반부터 80년대까지 근 25년간 반대 세력이 없는 김일성의 완전한 일당독재체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당중앙 집중 지도사업을 주도한 무지막지한 인물로서 그의 등용은 북한 체제내부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6기 21차 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9기 6차 최고인민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김도태선생이 발표한 금년도 통일정책과 내년도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분석에도 관련됩니다. 특히 두분 발제 선생님께서는 내년도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물론 북한은 기본 전략으로서 대남적화전략 및 통일선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대외전략 즉 대미·대일 특히 남북대화 부문에서는 적극적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향후 통일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수행된 통일정책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통일정책을 평가·반성하고 내년을 전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 통일정책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공식적 남북대화가 한번도 안 열렸었다는 점입니다. 이점에서 문민정부의 과오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3대 기조 이른바 3단계 통일방안을 내세웠습니다만 문민정부 출범 초에 너무 성급히 내세운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데로 역대 정권때 마다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5공이전 제가 일선 기자로 활동할 당시 판문점이나 해외에서 북한 기자들과 만나면 “남조선의 통일방안이 있으면 내놓아 보라” 혹은 “통일방안도 없으면서 김주석이 내세운 고려연방제를 왜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5공때 이른바 “민주회합 민족통일”방안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일반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그렇게 폐쇄적으로 급조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했다고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방안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만을 포함시켜서 통일의 외부 환경이나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했었습니다. 6공때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그 나름대로 제시했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한달 반만에 대통령 연설을 통해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대기조 중 그 첫째가 국민합의인데 그렇다면 문민정부답게 1년이나 6개월이 걸리더라도 전국적인 국민적 공론에 붙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냈으면 역시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은 이렇게 색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기회였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역시 급조해서 나오게 되었지요. 물론 6공때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한단계 높여서 3단계로 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역시 아쉬움이 남

습니다.

두번째 큰 문제는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겠다는 데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은 혼선 투성이입니다. 강·온건파간의 입장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 의견만 내세우면 책임자간의 이견이 많아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식자층까지도 체계적으로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번째 문제는 앞의 선생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북한에게 절묘하게 기습을 당했는데 모 일각에서는 NPT탈퇴를 예견했다고 하지만 예측을 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았느냐, 결국 대책없이 끌려다니고 조·미회담의 구경꾼으로 전략한 측면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1단계 회담 이후 나온 특사문제 역시 즉각대응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오늘에 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문제의 원천은 문민정부가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검토·정리해서 내놓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서 비롯됩니다. 사실 우리의 대북관계는 NPT탈퇴이후 핵문제로 인해 180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PT탈퇴 이전의 남북관계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회담이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는데 이제 조·미회담이 시작된 이후 그리고 북한의 NPT탈퇴 이후의 남북관계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의 전략대로 미국을 이용하고 미국은 남북관계를 이용해서 남북회담에 관여하고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응 자세도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NPT탈퇴이전의 대응 자세에 입각하여 특사문제 등

을 다루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문제와 관련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는 일관성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미 국무성, 백악관 안보팀, 국방성, CIA 등 네개 부처간의 고위 안보전략회의를 거쳐서 대북 강·온론이 제기됐지만 결국은 북한이 제시한 일괄타결에 대응해서 포괄적 타결방안으로 기울어진 직후에 김대통령께서 양국간 협의를 하지만 TS훈련은 우리의 의지로 중단한다고 했고 핵전면사찰과 남북대화 재개만이 선결과제라는 것을 제기하는 등 긍정적 입장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정부와 통일관계 각 부처에서 이런 결정을 재고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북한은 그 뒤 7개항 중 5개항을 허용하겠다고 종전의 입장을 수정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흔들려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달래려는 입장변화가 있고 이는 결국 핵문제가 UR협상의 쌀문제와 같은 재판이 되리라는 걱정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UR협상은 7년 전부터 예고된 회의입니다. 일본은 7년전부터 쌀시장 개방 불가피를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현재 우리가 이중고가로 매입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미 이양했습니다. 중앙이 할일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역대 정권이 자기 담당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 순방후 TS훈련을 포함하여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미국도 한국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협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외교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클린턴 정부도 내정을 다지기

위한 마무리 차원과 한국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북한에 대해 한번은 강경하게 나오겠지만 북한이 어느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 포괄적 협상형식으로 급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문민정부 내의 협상이 너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새해에는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다진 체제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미국과 핵문제를 타결하고 NPT탈퇴 이후 자국의 이익을 챙긴후 대미·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80년대 공산권 국가의 붕괴로 남북대화에서 방어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핵카드로 얻은 새로운 입지를 바탕으로 고도의 전략을 구상하여 남북 대화에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용할 것은 대담하게 수용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할 것은 제기하는 우리의 접근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회:** 이성춘 논설위원님께서 우리의 경각심을 높이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곽태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태환:** 우선 초대해 주신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니 미국 사람들의 정책기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 뉴스미디어에 소개되는 정책과제가 이해하는 미국정책간의 차이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책을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마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자료를 받아 보고 연구도 하며 발표되는 논문을 보면서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연구원은 이제 연구의

측적과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분의 글을 볼때 신박사님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변 환경이 내년에는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리라는 전망에 저도 동감합니다. 또한 다른 두 분이 발표하신 남북문제와 핵문제 타결에 대한 비교적 조심스런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거시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전략적인 입장 변화로 전술적 변화도 가져 오리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다면 왜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의 실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는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합의서는 전략적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남북한간에 맺은 최초의 문서입니다. 내년 북한핵 문제 해결로 남북합의서를 중심으로 대북경협이 활성화 될 때 이 문서의 실천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낼 것인가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타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낙관적 전망만을 할 것이 아니라 왜 타결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름많은 93년의 날씨에서 94년은 맑은 날씨의 새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 여부, 핵카드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93년 12월 13일 미국 NBC의 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서 에스핀 국방성 장관이 밝힌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은 1989년까지 1~2개의 핵무기에 쓸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징조는 없다 (there is no sign that North Korea is building a new nuclear weapons)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북한이 핵 의혹을 카드로 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핵 카드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New York Times 11월 20일자에 보도된 Package Deal이 이미 북한에 전달 됐기 때문입니다. 1~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 핵사찰을 수용하면 외교수립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만 이를 우리는 한·미간의 공조체제에 의해 한·미가 합의해서 전달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점에서 이성춘 논설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하고자 합니다. 한·미간의 공조 체제는 핵문제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Package Deal역시 공조체제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제 핵카드를 더이상 사용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미관계 개선에 있는 만큼 이번 Package Deal에 이 조건을 담고 있어 북한은 1~2단계의 미국측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내년도 목표인 조·일관계 개선을 위한 내부 정비를 마쳤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문제가 풀리고 조·미·일 관계개선이 된다는 전제하에 내부정비 및 조직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대남관계를 위해 72년 7.4 공동성명을 조인한 분을 부주석으로 임명한 것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을 위한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해석이 맞는지의 여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 북한의 대외 목표가 완성됐기 때문에 핵카드

의 유용성은 없어졌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메가와트의 핵재처리 시설에 대한 사찰수용 불가라는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드리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경우 한·미양국에 의한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이 문제가 타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낙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는 경협문제나 경수로 개발지원 등에서 교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전에 백상찬박사의 한국병리연구소에서 열린 토론에서 김일성이가 주한미군 철수를 정말로 원하는가에 대해 말한적이 있는데 당시 언론의 초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국내용 자료만 갖고 분석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한미군은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2단계 협상에서 6500명의 감축안이 유보된 것 아닙니까? 94년 핵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의 신방위전략에 따라 99년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감축될 것이고 이러한 미군의 철군문제를 협상카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궤교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전환시켜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지정 토론자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토론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분께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5분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진 : 먼저 부족한 논문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신 황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황교수님께서서는 중국외교를 분석 할 때 대외환경요인도 중요 하지만 대내문제 즉 중국의 대외환경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 입니다. 황교수님 지적처럼 모택동도 중국의 대내안정이 중국안보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말부터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부터는 대외정책에서 대외환경을 중시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대외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정책변화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의 대내 경제상황과 대내 정치환경은 동북아질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원하고 이를 위해서 대외협력정책을 추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난 11월 14차 당3중전회의를 개최하여 개방·개혁정책을 당 방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제 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때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경우 한·중간 그리고 중·미간의 관계악화와 동북아지역 다자간안보 구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나 대외 개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책을 취해야 하나 내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 지도부와의 관계접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미간 관계악화시 한국과의 경협강화 가능성도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다자안보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자안보체제 형성에 꼭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남지나의 남사군도 문제나 서사군도의 영유권 문제가 중국에게 중요한 현안인 만큼 역내 다자안보협력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패권적 지위에 대한 견제 카드로서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이 지역의 다자안보논의인 아세안지역포럼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대중국 안보협력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대중관계개선은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돌발사태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전망은 한국의 안보, 북한내부의 안정,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변국의 안정 유지가 중국외교의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북한내부의 혼란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주변 강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 북한내부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내의 사태가 중국안보에 위협 요인일 경우 중국내의 보수파들은 개입을 권유할 것입니다. 결국 대중관계에서 개혁지향적인 실용주의파와의 관계지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준 :** 황병무교수님의 코멘트를 중심으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명전략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북한의 일상생활 속에서 혁명·투쟁·전투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은 꼭 혁명이나 전투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자는 구호입니다. 3대 혁명전략이라고 할때 무력만을 통한 남한 사회의 전복을 생각하기 쉬운

데 꼭 그것 만은 아닙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혁명기조를 혁명을 하듯이 열심히 하자는 뜻도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대남 인식의 변화에 따라 혁명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북한은 남한을 미제로부터 해방해야 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한이 자주적인 해방의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남한은 분명 해방의 대상이요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혁명전략이라는 용어를 쓰냐 안쓰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북한이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북한의 변화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북한의 외형적인 태도에서의 변화는 인정하나 기본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개념은 전통적인 맑스·레닌주의의 민족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민족 개념은 아버지 수령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민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계급론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즉 남한의 자본가 계급이라도 수령을 경배하고, 돕고, 숭배하면 민족주의자고 민족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타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도태: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실천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상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사교환 문제와 남북고위급회담 문제를 내년의 전망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논의는 가능하겠습니다.

남북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이 실질적인 과정으로 들어 갈 때 대화의 출발점은 8차의 고위급회담을 거쳐 이루어진 기본합의서에 있으리라 봅니다. 북한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사교환 문제를 옹할 경우, 특사교환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즉, 의제나 특별한 이슈에 대한 절충 수단이나 의제 제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특사교환 문제를 대남전략의 술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위급회담의 한단계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의 실천문제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우리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발표자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방청석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마침 중국에서 오신 김서명 선생님께서 한 말씀 꼭 하시겠다는 서면질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김서명 교수님의 질의로 토론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서명 : 내년 남북한 관계의 정세 전망을 볼 때 금년은 추운 겨울이나 내년에는 따뜻한 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을 방문한 후 정세를 분석해 볼 때 북은 94년을 남북한의 관계정상화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북한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즉 많은 권력구조내의 인사 변화는 남북회담의 성공과 북한 경제의 회복을 통해 권력 승계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는 금년내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래 이 문제는 미국과 협상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는 왜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한내에 있는 미군 핵무기가 문제의 발단인 것입니다. 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핵불사용 천명은 더이상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진행할 필요성을 없게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개발할 경제·기술적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된다면 남북한간의 관계진전을 낙관할 수 있습니다.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그 책임을 북한에게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남한이 갖고있는 책임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일이 내년의 과제입니다.

둘째,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이제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체제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또한 김일성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국제적 환경은 중국의 지지입니다. 중국의 지지는 정치·경제적 원조도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회주의체제로서 북한이나 월남이 사회주의체제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입장에서 조선식의 사회주의 고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완전한 한국식의 통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식의 통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제까지 해방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해방을 할 역량이 없다고 봅니다. 해방전쟁은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침공보다는 방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 APEC 회담의 결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미간의 우호관계 형성을 체제유지에 좋은 국제적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번 회담의 결과를 북한에 통보한 바 있고 북은 이를 통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50년내에 현대화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주변 환경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안정은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중국에 많은 것을 요구하나 전쟁 물자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

다. 북한은 중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고 또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원합니다. 일본은 북·미간의 급속한 관계개선 진전을 주시하며 새로운 단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후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교류는 남한과의 합의서에 이미 있으나 남한과의 정치문제로 유보됐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개방 사례에서 화교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북한의 개방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한국정부가 94년도 남북간의 경제교류에 대한 연구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불신과 차이를 없애는 일이 통일 노력에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길정우 : 세분의 발표 논문과 여러 선생님들의 지적처럼 94년을 전망하는 데 북한 핵문제 해결이 주요한 문제라는 데 동감합니다. 다만 핵문제 해결 이후 모든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증진 되리라는 전망에는 유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문제 해결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우선 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 우리와 미국 및 주변국가들과의 견해 차이가 계속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연결시켜 생각할 때는 핵문제 해결이 어느 적절한 단계, 적절한 시점에서 핵문제 해결이 됐다는 결정을 내리는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판단과 결단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광교수님께서 플로어에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있는 Package Deal의 원류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한·미간에 정책 조율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광교수님께서서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Package Deal의 개념이 미국측 협상 담당자들에게 익숙치 않은 개념이라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간의 핵문제를 둘러싼 포괄협상, 일괄 타결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쪽에서 나왔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정부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단지 미국 정부내에서 이런 안을 쓰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은 지난 10월 중순경 남북간의 특사교환을 위한 1, 2차 실무접촉과정에서 미국무부의 피터 타노프 정무차관이 주재한 각 관련 부처간의 실무자회의에서 나름대로 잠정적인 정책적 결정을 내린 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카드의 효용성이 끝났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 저도 그러기를 기대 합니다 만은 북측의 입장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시한 Package Deal의 내용을 실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북한의 일차적인 목표인 북·미간에 수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치·경제관계의 완급을 북측이 주도하는 가운데 조절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카드의 효용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효용성 있는 카드는 무엇이겠는가? 이때도 역시 핵카드의 효용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의미의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9회 국내학술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附錄：會議概要〉

## 會 議 日 程

12月 15日(水)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會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05-15:05 會 議：南北韓關係 現況 및 '94년 情勢展望
  - 司 會：尹炳益(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 發 表：申相振(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中國의 東北亞 政策 展望：多者安保  
協力體 형성문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全賢俊(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북한의 對南戰略 分析 및 展望”  
金道泰(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15:05-15:20 Coffee Break
- 15:20-17:20 討 論：郭台煥(美 이스턴켄터키大 教授)
  - 李成春(한국일보 論說委員)
  - 黃炳茂(國防大學院 教授)
- 17:20-19:20 리셉션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の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 〈資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세미나시리즈 93-05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

---

---